1947년 제주3·1사건 연구
-집회와 총파업 주도세력을 중심으로-

박 찬 식*

Ⅰ. 머리말
Ⅱ. 해방 직후 항일운동가의 인민위원회 참여
Ⅲ. '3·1투쟁기념준비위원회'와 3·1집회
Ⅳ. '3·1사건대책위원회'와 3·10총파업
Ⅴ. 집회·총파업 주도세력의 사회적 성격과 운동 방향
Ⅵ. 맺음말

Ⅰ. 머리말

제주역사, 특히 근현대사의 흐름에서 일제 식민지시기로부터 해방으로 이어지는 시대적 전환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4·3봉기로 가는 길목에 서있는 '3·1사건'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3·1사건을 4·3 발발의 기점으로, 중요 원인이 되었던 사건 정도로 파악하여 왔다.[1] 이제 관점과 해석의 변

* 제주대학교 강사

1) 金奉鉉·金民柱, 1963 ≪제주도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 : 자료집≫ (文友社, 大阪); 박명림, 1988 <제주도 4·3민중항쟁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고창훈, 1989 <4·3민중항쟁의 전개와 성격> ≪해방전후사의 인식≫ 4 (한길사); 4·3연구소 현장채록팀, 1991 <한림면 현장조사 : 통일되민 다 말허쿠다>

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제주역사 자체의 관점과 제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3·1사건의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2] "지방연구의 축적을, 한국이라는 국민국가의 역사(흔히 일반사라 부르는 범주) 내지는 그 이념에 기여하는 당연한 과정으로 상정하는" 방식에서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3] 지역민의 입장에서 지역을 바라보고 국가와의 상관관계를 보아야 한다.[4] 국가주의적 공권력이 지배했던 관념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지역의 역사는 생동감을 갖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4·3을 바라보는 시각도 자리잡아야 한다고 본다.

필자는 위와 같은 문제 인식을 가지고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어 4·3봉기로 이어지는 중간지점에 위치한 3·1사건에 대한 역사주의적 해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아직까지 3·1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역사적 해석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관찰의 중심은 인간집단이지만, 대다수 민중의 정서를 주도해나간 세력을 중심으로 보고자 한다.[5] 주도세력과 연관해서는 지금까지 신문 기사와

≪제주항쟁≫ 1; 4·3연구소, 1993 <대정지역의 4·3항쟁> ≪4·3장정≫ 6; 김창후, 1993 <1948년 4·3항쟁－봉기와 학살의 전모> ≪역사비평≫ 20; 제민일보 4·3취재반, 1994 ≪4·3은 말한다≫ 1; 양정심, 1999 <주도세력을 통해서 본 제주4·3항쟁의 배경>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이 글들은 4·3의 전체 전개과정을 다루면서 3·1사건을 4·3봉기를 유발한 주요 원인이 된 사건으로 보고 있다.

2) 위 고창훈의 글에서도 비슷한 시각이 보인다. 그는 3·1사건을 민중의 평화항쟁으로 보면서 자치정부와 자주교육을 운용하던 제주민중이 미군정과 대립하면서 일어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의 글에서는 제주민중과 결합되고 이들의 정서를 주도해 나간 새로운 주도세력에 대한 검토가 취약하다.

3) 이훈상, 2001 <미시사와 多聲性의 글쓰기 : 지역사, 향리집단,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복수의 시각들> ≪한국사론≫ 32 (국사편찬위원회) 73

4) 지수걸, 2001 <한국 근현대 지역사 서술체계와 활용자료－충남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론≫ 32 (국사편찬위원회) 311~312

5) 위 양정심의 글에서 항일운동가 그룹의 남로당으로의 전환을 주목하며, 4·3항쟁의 배경을 주도세력 중심으로 보고자 하였다. 그는 글의 결론에서 "격렬한 항일운동을 통하여 정통성을 인정받은 좌익정당은 인민위 조직과 3·1발포사건, 3·10총파업 등의 대중투쟁 속에서 제주도민과 유기적으로 결합해 나갔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남로당 제주도당이 무장봉기를 일으켰을 때 제주도민

증언자료에 의존해서 서술해왔던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자료인 재판 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고문을 통한 허위 진술, 조직 보안을 위한 의도적 은폐, 일률적 틀로 짜여진 심문조서가 대본이 된다는 사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은 사건 연관자의 경력, 사건 참여 경위, 활동 사항, 인적인 연결망, 적용 법률 등 기본 사실을 소상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자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판결문 자료는 주도세력의 범위를 몇몇에 불과한 전체 지도부 중심에서 읍·면 마을과 직장 단위의 활동가로 확장하여 검토할 수 있게 함으로써 3·1사건의 역사적 성격과 의미를 좀더 다양하면서도 깊이 있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Ⅱ. 해방 직후 항일운동가의 인민위원회 참여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자 제주도에는 미군정이 들어서게 되었다. 미군정기에 제주도는 정국의 혼란과 경제의 파국, 모리배의 성행 등으로 혼미한 상황이었다. 미군정시기에 제주지역 인민위원회의 활동은 상당히 활발하였다. 인민위원회가 벌인 자치운동은 지역주민들의 지지를 받아 '합법정부', '행정기관'으로까지 인식될 정도였다. 또한 인민위원회는 각 면별로 국민학교·중학원 등을 설립하여 자치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인민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도내 각 면과 마을 행정을 주도하였다. 미군정에 의해 행정이 실시되었지만 여러

이 참가할 수 있는 기초가 된 것이다. … 당시 제주도민은 통일국가 수립 열망을 직접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제주도를 단선을 저지한 유일한 지역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이는 이후의 항쟁을 1년여간이나 지속시킨 원동력이 되었다. 즉 제주도민은 항쟁을 통해 통일정부를 갈망하는 민중의 의지를 대변해 주었고, 이 점에서 4·3은 한국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전반적으로 이 글의 논조에 동의하면서도 신국가 수립을 위한 중앙 위주의 시각을 유지했다는 점에서는 필자와 의견을 달리한다. 제주 민중들의 입장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해석은 좀더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마을에서 인민위원장이 이장·면장이 되었고, 인민위원회 사무실은 어김없이 마을 향사를 사용하였다.

제주도민들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일제 식민지시대의 압제에서 벗어나 진정한 독립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고통을 감수하면서 인민위원회 활동을 함으로써 미군정의 정책을 견제하였다. 미군정 당국에서도 제주도 인민위원회는 "도 내의 유일한 정당으로서, 모든 면에서 정부나 다를 바 없는 유일한 조직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1946년 12월 동아일보는 "세간에서 제주는 좌익 일색이며 人委의 천하라는 말이 있으나, 제주의 인위는 건준 이래 양심적인 반일제 투쟁의 선봉이었던 지도층으로써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에 분립된 韓獨·獨促國民會 등의 우익단체와도 격렬한 대립이 없이 무난히 자주적으로 도내를 지도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6]

인민위원회 지도부 대다수는 식민지시대 항일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해왔던 사람이거나 귀환한 젊은 세대들로서, 교육과 인민위원회 활동에 헌신적이었기 때문에 대다수 도민들의 신뢰를 받았다.[7]

〈표 1〉 제주도내 읍·면별 인민위원회 지도부 명단

읍·면	직책	이름	나이	출신지	직업	항일 경력
제주도 (전체)	위원장	오대진	48	하모	단추제조업	재건야체이카 사건(1932)
	부위원장	최남식	48	제주	교사	
	총무부장	김정로	39	제주	노동	조공 야체이카(1927)
	재정부장	김택수	45	제주	무직	위와 같음
	산업부장	김용해	45	하귀	무직	일본 전협 활동
	보안부장	김한정	50	가파	기자	재건야체이카 사건(1932)
	선전부장	현호경	37	성산	단추공장업	일본 전협 활동
	조직부장	조몽구	38	성읍	무직	위와 같음
	보건후생부	좌창림	38	곽지	의사	

6) <寶庫 제주도 시찰기(하)> ≪동아일보≫ 1946. 12. 21

7) 김동만, 1991 <제주지방 건국준비위원회·인민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역사비평≫ 12;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74~79

제주읍	위원장	최남식	48	제주	교사	
	부위원장	강규찬	31	제주	노동	일본 전협 활동
애월면	위원장	김덕준	43	납읍	농업	
	부위원장	양군옥	45	동귀	하귀1구장	사상서적 탐독
한림면	위원장	고운선	38	한림	잡화상	재건야체이카 사건(1932)
	부위원장	좌두영				
	서기국장	김행돈	30			전협금속 오사카지부(1935)
	총무부장	김태안	36	한림	농업	재건야체이카 사건(1932)
	문교부장	양관표	36	한림	농업	대판에서 노동운동
	산업부장	고종석				
	선전부장	양병시	30	한림	잡화상	한림노농연구회(1934)
	치안부장	박성관				
	부녀부장	오매춘				
	농민부장	박성선	53	금악	농업	
대정면	위원장	우영하	59	모슬포	대정면장	
	부위원장	이신호	44	모슬포	주류소매상	재건야체이카 사건(1932)
	행정부장	이신호	〃	〃	〃	위와 같음
	총무부장	윤평석	37	이도	상업	
	선전부장	이운방	37	하모	농업	농업학교 맹휴사건(1931)
	문교부장	문달진				어린이날 시위사건(1929)
	치안부장	윤성추	28	강정	무직	
안덕면	위원장	고군칠	55	감산	면 서기	
	부위원장	이중환	53	사계	농업	
중문면	위원장	이봉옥	45	회수	농업	
서귀면	위원장	이도백	37	가파	상업	서귀면 독서회 사건(1935)
	부위원장	송태삼	35	서귀	농업	위와 같음
남원면	위원장	오동학	43	위미	농업	
표선면	위원장(1대)	송건은	60	하귀	상업	
	위원장(2대)	김민추	55	표선	농업	
	부위원장	홍성흡	43	표선	농업	
성산면	문서부장	한순화	32	고성		
구좌면	위원장	문도배	37	세화	농업	재건야체이카 사건(1932)
	부위원장	오문규	44	하도	농업	위와 같음
	서기국장	오화국	32	하도	농업	농업학교 학생운동(1931)
	총무부장	고기화	36	하도		
조천면	위원장	안세훈	53	조천	농업	조천소비조합 사건(1939)
	부위원장	조규창	33	신촌	농업	

※ ≪4·3장정≫ 5, 17; ≪4·3장정≫ 6, 26; ≪제주항쟁≫ 229; 판결문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나이는 1945년 기준.

제주지역 인민위원회 지도부는 대체로 항일운동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에 친일행적이 없지만 명망성 있는 행정관료 및 교육자 출신을 배치하고 30대 초반의 청년층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우선 제주도 인민위원회 지도부는 1932년 해녀투쟁으로 인해 검거된 재건 조선공산당 제주야체이카 관련자들과 일본에서 재일조선인 노동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일제하 제주지역과 일본으로 나누어져 있던 항일운동가 그룹이 대승적 통합을 이루었던 것이다.[8]

지역별로는 제주읍, 조천 · 구좌 · 대정 · 서귀면 등 일제하 항일운동이 강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항일운동가들이 지도부를 형성하였다. 지도부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조천의 경우 김시범 · 김유환 · 김시택, 애월면은 김용해 · 김달준, 성산면은 현호경 등 일제하 3·1운동, 사회운동, 재일조선인 민족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주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인민위원회와 함께 지역별로 청년조직도 구성되었다. 건준 청년동맹은 9월 말 문재진을 초대 위원장으로 하여 창립되었다. 그 선언문에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는 모든 난관을 돌파하고 인민대중의 기본적 요구에 응하여 일본 제국주의적 세력을 축출하는 동시에 우리의 자주독립을 방해하는 외세와 반민주주의적 모든 세력에 대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청년의 정치적 사회적 해방을 기한다"고 하여 민족적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었다. 청년동맹은 부녀동맹과 함께 전도적으로 광범위하게 조직되어 인민위원회와 함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청년동맹의 조직은 제주도내 11개 읍 · 면에 전부 지부를 두었다. 읍 · 면별 청년동맹 위원장은 문재진(제주읍), 장기우(애월면), 김행돈(한림면), 윤성추(대정면), 이성두(안덕면), 현호경(성산면), 부선언(구좌면) 등이었다.

---

8) 일제하 제주도 항일운동의 성격에 대해서는 필자의 다음 글이 참고된다. 박찬식, 1999 <제주지역 항일독립운동가의 시대별 성격> ≪제주도사연구≫ 8

〈표 2〉 제주도내 읍·면별 청년동맹 지도부 명단

읍·면	직책	이름	나이	출신지	직업	항일 경력
제주도	위원장	문재진	34	제주		재건야체이카 사건(1932)
(전체)	조직부장	강성렬	27	하천	무직	
제주읍	위원장	이창욱	32	용담	용담리구장	
	조직부원	강대석	23	법환	양복재봉업	
	정보부원	배두봉	32	하귀	무직	하귀야학회 사건(1934)
	정보부원	고영수	21	삼도	농업	
애월면	위원장	장기우	32	애월		
한림면	위원장	김행돈	30	한림		전협금속 오사카지부(1935)
대정면	위원장	윤성추	28	하모	무직	
	부위원장	이종우	23	하모	무직	학병 거부(1944)
안덕면	위원장	이성두	37			
성산면	위원장	한순화	32	고성		
	서무부장	채희관	19	성산		
구좌면	위원장	부선언	31	하도		
	집행위원	오달존	27	상도	농업	

※ ≪4·3장정≫ 5, 33; 판결문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나이는 1945년 기준.

1947년 1월 12일 청년동맹은 민청 제주도위원회로 개편되었다. 민청은 조선민주주의민족전선(민전)의 유관 조직으로서 강력한 청년 단일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제주도 민청 초대 위원장은 김택수였다가 1947년 3월 김은환으로 바뀌었다. 40대 후반의 중진 항일운동가 출신의 김택수가 일선에서 물러서면서 민청은 젊고 진보적인 청년들이 주도해 나갔다. 읍·면별 민청 위원장은 제주읍(이창구), 조천면(김평원), 구좌면(오달준), 서귀면(송태삼), 중문면(강팽성), 한림면(김행돈), 애월면(강제형), 대정면(이종우), 성산면(한순화) 등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청년들로서, 제주도내 사회운동과 일본에서의 노동운동을 경험했으며, 이종우는 학병을 거부하기도 했다.

〈표 3〉 제주도내 읍·면별 민청 지도부 명단

읍·면	직책	이름	나이	출신지	직업	항일 경력
제주도 (전체)	위원장(1) 위원장(2)	김택수 김은환	48	제주 조천	무직	신인회(1925), 조공야체이카(1927) 일본 전협 활동
제주읍	위원장 부위원장	이창욱 고시진	35 32	용담 애월	상업 제지업	
애월면	위원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장제형 김홍규 김승휴	27			하귀야학회 사건(1934)
한림면	위원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김행돈 박행익 박동효	32			전협금속 오사카지부(1935)
대정면	위원장	이종우	25	하모	무직	학병 거부(1944)
안덕면	위원장 조사부장	장진봉 오형택	36 32	창천 창천	농업 농업	부정호세불납동맹(1931)
중문면	위원장 부위원장 조직부장 총무	강팽성 김성추 고두옥 이군실	39 41 27 22	법환 중문 중문 중문	농업 농업 농업 농업	일본에서 노동운동
남원면	위원장(1) 위원장(2)	현승균 정창림	29 31	성산 신흥	의사조수 농업	
서귀면	위원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총무부장	송태삼 현원학 허순위 강만수	37 31 33	서귀 서홍 서귀	농업 무직 농업	서귀면 독서회 사건(1935)
성산면	위원장 부위원장 조직부장 소년부장	한순화 현봉구 채희관 김경환	34 21 22	고성 온평 성산 고성		
구좌면	위원장 부위원장 교양부장	오달존 한태삼 정권수	 25	상도 상도	 농업	
조천면	위원장 의장단	김평원 김원근 김대진 김완배 김의봉	33 40 35	조천 함덕 북촌	농업 농업 농업	조천 항일유언비어사건(1939) 함덕리 적색농민조합위원회(1933)

※ ≪4·3장정≫ 5, 39~40; ≪제주신보≫; 판결문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나이는 1947년 기준.

한편 1947년 1월~2월 사이에 부녀단체도 개편되었다. 1947년 1월 25일에 제주도 부녀동맹(위원장 김이환, 부위원장 고인선 · 강어영)이 결성되었다.[9] 이 자리에서 김이환은 "조선의 해방은 8할 이상을 점하고 있는 무산대중과 일천오백만 여성의 해방 없이는 도저히 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우리는 이러한 조직체를 가짐으로써 이를 위하여 투쟁하여야 된다"는 개회사를 함으로써, 부녀동맹이 지향하는 바를 명시하였다. 이어서 2월 21일에는 계몽운동에 치중해 오던 제주읍 부인회를 해소하고 제주읍 부녀동맹(위원장 고인식, 부위원장 양청렬 · 김금순)으로 개편 강화하였다.[10]

민청과 부녀동맹의 결성에 이어 제주도에서는 뒤늦게 좌파세력의 연합체인 '민주주의민족전선'(민전)이 조직되었다.[11] 민전 결성식은 1947년 2월 23일 제주읍내 조일구락부에서 있었다.[12] 제주도 민전은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사항의 실천, 지하조직으로 활동하던 남로당 제주도당의 표출 계기 마련, 다가오는 28주년 3·1기념행사를 치르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결성되었다.[13] 민전 결성을 계기로 제주도 좌파세력은 남로당을 중심으로 구심체를 확고히 함으로써 조직활동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결성식 자리에서 조몽구가 친일파 민족반역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 본 도민에 있어는 일제시대의 주구들이 어느 정도 자백하고 있으나 신판 반역자가 출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 악질 중 악

9) ≪제주신보≫ 1947. 1. 28
10) ≪제주신보≫ 1947. 2. 24
11) 중앙에서는 1년 앞서 1946년 2월 15일 민전이 결성되었다. 제주 민전이 중앙보다 1년 늦게 결성된 것은 제주지역의 특수성-1947년 초까지도 제주도 좌파세력은 역관계에서 대세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통일전선체 조직에 주력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에 연유한다.
12) ≪제주신보≫ 1947. 2. 26
13) 3·1기념행사를 치르기 전에 민전이 결성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2월 17일 '3·1기념행사준비위원회'가 끝난 뒤에 안세훈 · 고창무 · 김정로 · 김용해 등의 간담회에서 제기되었다(≪제주신보≫ 1947. 2. 18)

> 질은 일제에 아부하던 자가 또다시 일제시대와 같이 권세를 부려 보려는 야욕 아래서 인민위원회에 가담함으로써 인민에 아부하려다가 탄압이 심함을 보니 슬그머니 빠져서 자취를 감추고 있는 기회주의자이다. 이러한 부류는 소위 명사란 자가 그러하다. 또다시 사실무근한 폭동계획 운운의 모략적 밀고를 당국에 하고 더구나 모종 배경으로써 의식적으로 반동하고 또한 모리행위를 자행하여 동포를 착취하는 자 등을 지적한 바 있었고 악질통역에 언급하여 양심적인 행동을 희망한다는 요청의 意를 표하였다.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반동하여 오던 자에게 대해서는 엄격한 자기비판 아래 반성하는 자는 민전으로써 포옹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

즉, 소위 기회주의자 때문에 인민위원회 중심의 대중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민전을 비롯한 새로운 조직 중심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고, 남로당 제주도당의 표출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결성식에서는 의장단에 안세훈 · 이일선 · 현경호가, 부의장단에 김택수 · 김상훈 · 김용해 · 오창흔이, 집행위원으로 김정로 등 33명이 선임되었다. 이어서 2월 24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부서와 책임자를 결정하였다.[14] 민전 조직도 각 읍 · 면별로 결성시킬 예정이었으나, 3·1기념식이 임박한데다 발포사건과 총파업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조직되지는 못하였다. 현재 확인되는 지역은 대정면 · 구좌면 정도이다. 대정면의 경우 3월 16일 대정국민학교에서 대정면 내의 좌익정당단체 · 인민위원회 · 농민위원회 · 민청 · 부녀동맹 등 관계자 2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민전 대정면위원회가 결성되었다.[15]

14) ≪제주신보≫ 1947. 2. 26
15) 제주지방심리원 판결문(서기 1947년 刑公第207號)

〈표 4〉 제주도내 읍·면별 민전 지도부 명단

읍·면	직책	이름	나이	출신지	직업	항일 경력
제주도 (전체)	의장단	안세훈	55	조천	농업	조천소비조합 사건(1939)
		이일선				
		현경호	54	삼도	중학교장	
	부의장단	김택수	48	제주	무직	신인회(1925), 조공야체이카(1927)
		김상훈				
		김용해	47	하귀	교사	
		오창흔				
	사무국장	김정로	41	제주	노동	조공 야체이카(1927)
	조직부장	김정로	〃	〃	〃	〃
	선전부장	좌창림				
	문화부장	김봉현	29	금악	중학교원	
	조사부장	정상조	50	삼도	농업	
	재정부장	김두훈	45	삼도	운송업	
대정면	의장	이도일	51	가파	주조업	
구좌면	선전부장	강기홍	37	하도	농업	

※ ≪제주신보≫; 판결문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나이는 1947년 기준.

Ⅲ. '3·1투쟁기념준비위원회'와 3·1집회

제주의 해방정국은 1947년 3·1절 기념대회를 계기로 요동치게 된다. 이날 경찰의 발포로 제주도민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제주도내 관공서와 학교·직장 등 제주도민은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3·1절 28주년 기념식과 시위·발포, 3·10 총파업으로 이어지는 '3·1사건'은 그 준비 과정에서는 1947년 2월 17일 결성된 '3·1투쟁기념준비위원회'가 중심이 되었다. 이를 지원하는 조직으로서 2월 23일 결성된 제주도 민전(위원장 안세훈·이일선·현경호)과 민청이 중심이 되었다. 그리고 3월 1일 당일 발포 사건 이후에는 각 읍·면별, 직장별로 '3·1사건대책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이러한 3·1사건 관련 조직들은 각 읍·면별 인민위원회, 민청·부녀동맹 등 기존조직과 밀

접한 연관성을 가지면서 학교 교사와 각 직장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구성되었다.

한편 내부적으로 도민들의 3·1절 기념식 참여를 독려하고 발포사건에 대응하여 총파업을 주도했던 핵심 조직은 아직 표면화되지 않은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였다. 남로당 제주도당은 1945년 9월 하순에 조직된 조선공산당 제주도위원회를 해소하고 결성되었다. 결성대회는 1947년 2월 12일경 북제주군 애월면 하귀리에서 개최되었다.[16] 위원장은 조천의 안세훈이 맡았고, 주요 활동가로는 김정로·김유환·김용해·김은환·문도배·현호경·조몽구·오대진·김한정·이신호·이운방·김용관·김두봉·김택수·문재진·부병훈·송태삼·이도백 등이 망라되었다.[17] 이들은 인민위원회 지도부를 형성했던 사람들로서, 대부분 항일운동의 전력을 소유하고 있었다. 남로당은 공개적으로는 인민위원회 명칭을 빌어서 활동했지만, 내용적으로는 당시 운동의 중심에 있었다.

---

16) 이도백의 판결문에는, 그가 남로당 제주준비위원회 김정로의 권유 추천을 받고 1947년 2월 12일경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면 하귀리에서 개최된 남로당 결성대회에서 당에 가입한 것으로 적혀있다(단기 4287년 刑上第223號). 조몽구의 판결문에도 조선공산당 제주도당이 1947년 2월경 남조선노동당으로 개편 발족하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와있다(단기 4285년 刑公比第29號). 김용해의 판결문에도 마찬가지로 1947년 2월 중순경 제주도 남로당위원장 안세훈의 추천으로 당의 부위원장 겸 선전부장에 임명되었다고 되어있다(단기 4282년 刑公合第321號). 한편 이도백의 판결문에는 "당시(1947년 3월)는 군정에서 남로당을 공인하였다"고 하여 남로당이 공식 정당으로 활동했음을 알려준다.

17) 앞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94

18) 참고로 1948년 4·3 봉기를 전후하여 개편된 남로당 지도부 명단을 표로 작성하여 보았다.

〈표 6〉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제주읍위원회 지도부 명단(1948. 5~1948. 6)

읍·면	직책	이름	나이	출신지	직업	항일 경력
	위원장	김유환	47	조천	잡화상	조천소비조합 운동(1939)
제주도	부위원장	조몽구	41	성읍	무직	일본 전협 활동
(전체)	간부부장	현두길				
	조직부장	김달삼	24	영락	대정중교사	

〈표 5〉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읍·면별 지도부 명단(1947. 2~1947. 3)[18]

읍·면	직책	이름	나이	출신지	직업	항일 경력
제주도(전체)	위원장	안세훈	55	조천	농업	조천소비조합 사건(1939)
	부위원장	김용해	47	하귀	교사	일본 전협 활동
	재정부장	이창욱	35	용담	상업	
	농민부장	김용관	37	봉개	하귀교교장	일본 전협 활동
	선전부장	김용해	47	하귀	교사	일본 전협 활동
	민청부장	김은환				일본전협화학 오사카지부(1933)
	당무위원	이시형				
대정면	위원장(1)	이신호	46	하모	주류소매상	재건야체이카 사건(1932)
	위원장(2)	이운방	39	하모	농업	농업학교 맹휴사건(1931)
	조직부장(1)	고문수	41	인성	농업	
	조직부장(2)	김달삼	23	영락	중학원교사	
	부녀부장	진해생	37	하모	미곡상	설교방해사건(1930)
	상임위원	허기룡	33	상모	농업	
중문면	위원장	김인평	38	상예	38	
조천면	위원장	김시탁				조천 만세운동(1919)
	선전부장	김민식	42	조천	농업	

※ 관련 판결문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나이는 1947년 기준.

	선전부장	김용관	38	봉개	하귀교교장	일본 전협 활동
	농·노부장	이종우	26	하모	무직	학병 거부(1944)
	청년부장	김광진				
	여성부장	김금순	42	제주	무직	
	재정부장	김광진				
제주읍	위원장	강규찬	34	제주	노동	일본 전협 활동
	부위원장	고갑수				
	간부부장	강대석	26	법환	양복재봉업	
	선전부장	고칠종	31	이호	농교교유	
	청년부장	임태성				
제주읍 특별위	위원장	김응환				
	조직부장	강대석	26	법환	양복재봉업	
	선전부장	이창수	33	제주	무직	
	학생부장	한국섭				
	재정부장	이창욱	35	용담	용담리구장	

※ ≪제주4·3자료집≫ Ⅱ (제주4·3연구소); 판결문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나이는 1948년 기준.

남로당 제주도당은 3·1절 28주년을 앞두고 우선 '3·1투쟁기념준비위원회'[19] 결성에 주력하였다. 우선 2월 17일 오후 2시에 관공서를 비롯한 사회단체·교육계·유교·학원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석한 가운데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안세훈, 부위원장에 현경호·오창흔 등을 추대하고 총무부·재정부·선전동원부 등 부서를 설치하고, 위원 28명을 선정하였다.[20] 제주도당은 우선 이 '3·1투쟁기념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읍·면별로 인민위원회·민청·부녀동맹과 각종 단체 및 직장 대표자로서 '3·1기념준비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결의하였다. 당시 남로당에서 준비위원회 명의로 각 읍·면에 보낸 「3·1운동 기념투쟁의 방침」은 아래와 같다.

① 각 읍·면에서는 인민위원회·민청·부녀동맹 기타 각종단체 및 직장 대표자로 3·1절기념준비위원회를 조직할 것. 준비위원회에는 동원부·선전선동부·준비부를 둘 것. 각 부락 및 직장에서도 此에 준하여 준비위원회를 조직할 것. 단 학교에는 교직원과 학생대표를 조직할 것.

② 24일까지 3·1운동의 원인·경과·의의·결과를 10월 인민항쟁과 현 정세에 결부시켜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의 방향에로 전 인민의 진로를 밝힐 것. 각 부락 및 직장에서의 선전선동사업 및 동원 예상을 반드시 각 읍·면 준비위원회에 보고케 하고 즉시 각 읍·면 준비위원회에서는 도 준비위원회에 집합 보고할 것.

③ 25일로부터 28일까지 각 부락 및 직장대회를 소집하여 3·1시위운동에 전원 참가할 것을 결의하고, 班 및 직장 단위 동원 조직하여 지휘자 및 자위대(2, 3인)를 선정하여 부락 준비위원회에 보고할 것.

④ 당일에 지휘자 및 자위대는 반 및 직장별로 동원시켜 시위행렬

19) 위 김용해의 판결문에는 '3·1절기념투쟁위원회'라고 적혀있으나, ≪제주신보≫에 기록된 '3·1투쟁기념준비위원회'가 공식 명칭으로 보인다. 남로당 문건에는 '3·1기념준비위원회'로 약칭했음이 확인된다(앞 ≪제주항쟁≫ 161).

20) ≪제주신보≫ 1947. 2. 18

로 부락 준비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집합할 것.

⑤ 각 읍·면 준비위원회가 지정한 시간 장소에 각 부락 준비위원은 동원된 전원을 시위적 행렬로 집회할 것. 단체기 및 標記旗 특히 人委旗를 들을 것.

⑥ 당일 식장에서의 아지푸로(선전선동)는 1인 5분 이내로 하야 대중에게 지리한 감을 주지 말 것.

⑦ 아지푸로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바람의 방향 지세 동원된 인원 수 등을 과학적으로 잘 참작할 것.

⑧ 이 앙양된 인민의 기세를 살려 각 부락 및 직장에서 각종 형태의 대중집회를 가지고 농위·민청·婦同·노조, 기타 독서회·연구회·문화서클 등의 조직 강화를 도모할 것.

⑨ 党의 각급 기관에서는 3일 이내에 비판회를 가지고 그 결과를 상급기관에 보고할 것.

⑩ 선전선동 및 해설사업의 재료는 ≪朝鮮近代革命史≫ 말단의 3·1 운동에 관한 문헌과 ≪解放≫ 12호의 기재와 기타 문헌에 의하여 취할 것.[21]

즉,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각 마을 및 직장대회를 소집하여 3·1절 기념식에 참가할 것을 독려하고, 이러한 3·1절 집회에 대중들의 참여를 통해 고조된 열기를 살려 각 마을 및 직장에서 각종 형태의 대중집회를 가지고 농민위원회·민청·부녀동맹·노조, 기타 독서회, 연구회, 문화서클 등의 조직 강화를 도모하였다. 이는 남로당이 3·1집회를 당의 세력 강화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남로당 제주도당은 1919년 3·1운동의 원인·경과·의의·결과를 1946년 '10월 항쟁'과 결부시켜 정리한 「3·1 기념 해설사업의 요령」, 「3·1운동 기념투쟁 방법」, 「3·1운동 기념투쟁의 목표」 등을 정리한 문건을 각 마을 세포조직에까지 전달하였다.[22] 이런 방식으로 각 읍·면별로 3·1준비위원회가 조직되고 투쟁

21) 위 김용해의 판결문. 이 방침은 위 ≪제주항쟁≫ 161~162에도 똑같이 수록되어 있다.

방침이 전달되었다. 판결문을 통해 파악되는 읍·면별 준비위원회 조직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읍·면별 3·1준비위원회 조직 과정

제주읍	○ 2월 25일, 남로당 제주읍위원회, 3·1절을 앞두고 지시 실천사항과 연락·동원 방법을 토의하기 위하여 강규찬(당 제주읍위원장)의 집에서 회의 개최 ○ 제주읍당, 도당 지시사항에 의거, 별도로 「3·1기념 캄파에 관한 건」, 「선전 선동 요강」 등을 각 세포조직과 민청 조직에 지시[23]
조천면	○ 2월 초순, 김시탁(남로당 조천면위원장)·김민식 등이 3·1기념행사 토의 ○ 2월 26일, 조천중학원에서 김시범(조천면장)을 비롯한 면내 관공서·면민·유지 등이 모여서 3·1기념투쟁준비위원회 조직 ○ 2월 27일, 김시탁·김민식 등이 3·1기념행사에 대한 면민 동원 방법 토의
남원면	○ 2월 19일, 현승균(면 민청위원장) 외 2백명 집회, 3·1기념준비위원회 조직－민청결성대회라는 명칭을 썼음
서귀면	○ 2월 25일, 서귀면사무소에서 송태삼(서귀면 민청위원장) 외 5명이 집회, 서귀면 3·1기념준비투쟁위원회 조직
대정면	○ 2월 21일, 이운방(당 대정면위원장)·이신호·우영하(대정면장) 등 30여 명 집회, 3·1기념준비 대정면공동위원회 조직

당시 읍·면별 3·1투쟁기념준비위원회 지도부의 구성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8〉 읍·면별 3·1준비위원회 지도부 명단

읍·면	직책	이름	나이	출신지	직업	항일 경력
제주도 (전체)	위원장	안세훈	55	조천	농업	조천소비조합 사건(1939)
	부위원장	현경호	54	삼도	사립중교장	
	부위원장	오창흔	35			
애월면	위원장	양군옥	47	동귀	하귀1구장	사상서적 탐독
	부위원장	김용해	47	하귀	교사	일본 전협 활동
한림면	위원장	김경봉	40	한림	양화상	적색농조 사건(1934)
	부위원장	양공팔				
대정면	준비부장	이종우	25	하모	무직	학병 거부(1944)

22) ≪위 책≫ 164~169
23) ≪위 책≫ 171~181

남원면	위원장	오동학	45	위미	농업	
구좌면	위원장	오군표				
	부위원장	정생두	34	상도	농업	
조천면	위원장	김유환	46	조천	잡화상	조천소비조합 운동(1939)
	부위원장	김시범	58	조천	조천면장	조천 만세운동(1919)

※ ≪제주경찰사≫ 281; ≪제주신보≫; 판결문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나이는 1947년 기준

지역별 준비위원회 조직과 더불어 직장·학교별로도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기념일을 앞두고 각 학교 대표자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3·1투쟁기념준비위원회와 보조를 같이하여 기념행사를 거족적으로 행하되, 다음 3단계로써 행동방침을 결정하였다.

① 준비기간 중 각 학교별로 3·1투쟁기념준비위원회를 조직할 것
② 3·1기념의 역사적 의의를 아동에게 인식시키고 아동을 통하여 학부형에도 인식시킬 것
③ 투쟁기간에 있어서는 3·1운동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때문에 완전독립을 위하여 투쟁할 것이며 기념행사에 대하여는 반성의 기한을 둘 것[24]

학교별로 따로 준비위원회가 조직되기도 하였다. 2월 27일 제주농업중학교 교사 14명과 생도 13명이 집회를 가져 3·1절준비위원회를 조직했고,[25] 2월 28일에는 한림국민학교 교원 25명이 3·1절기념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다.[26]

1947년 3월 1일 오전 11시 '제28주년 3·1 기념 제주도대회'가 열리던 제주북국민학교 주변에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날의 군중 수는 대략 2만 5천~3만 명으로 추산됐다.[27] 이날 10개 면에서

24) ≪제주신보≫ 1947. 2. 26
25) 제주지방심리원 판결문(서기 1947년 刑公第133號)
26) 제주지방심리원 판결문(서기 1947년 刑公第179號)
27) 남로당 제주읍위원회에서 삼양1구 야체이카에 내려보낸 전문에는 조직군중 1만6,600명, 미조직군중 4천 명이라고 하였다(앞 ≪제주항쟁≫ 181). 또 다른 전문에는 조직군중 1만7,000명, 기타 합하여 2만5,000명이라고 밝혀놓았다(≪위

도 별도의 기념식이 열렸는데 각 지방마다 수천 명씩 모였다. 경찰은 원래의 제주경찰 330명과 응원경찰 100명 등 430명으로 보강하고 이 가운데 150명을 제주읍내에 배치, 시골에서 올라오는 군중을 막아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행사장 주변에는 제주읍뿐만 아니라 애월면·조천면 등 주변 주민들이 모여들었으며, 학생들도 대거 참여했다.

당시 읍·면별 3·1기념식 집회 상황 및 참석 인원을 판결문에 의거해 정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표 9〉 읍·면별 3·1기념식 집회 상황

읍·면	상황		참석인원 (최소~최다)
	장소	특징	
제주읍 (조천·애월면)	제주북 국민학교	조천·애월면 합동집회. 경찰의 사전허가 받음. 집회 후 시위 전개. 발포사건 발생.	2만~3만
구좌면	세화국민학교		1,000~2,000
성산면	大山제약공장 광장	성산면 민청이 주도.	1,200~1,500
표선면		독자집회 없음.	
남원면	남원국민학교	집회 후 남원지서까지 시위 전개.	1,000~1,500
서귀면	서귀국민학교 (예정)미개최	집회 준비했지만 경찰의 사전검속으로 미개최. 서홍리 민청원 시위 전개.	
중문면	중문국민학교	중문면 민청 주최. 집회 후 시위 전개.	2,000~2,500
안덕면	안덕국민학교	안덕면장 주최. 집회 후 씨름대회 개최.	1,000~1,300
대정면	대정국민학교	집회 후 음악회 개최.	4,000~6,000
한림면	한림국민학교	집회 후 시위 전개.	5,000~6,000
우 도	연평국민학교	구좌면과 별도 집회. 집회 후 시위 전개	300
합 계			3만5,500 ~5만800

이를 통해 보건대 1947년 제주도 3·1집회는 읍·면 단위 모든 마을과 직장에서 전 계층이 참여한 거도적 집회였다고 할 수 있다. 1947년도 제주도 인구가 28만여 명이었음에 비추어본다면,[28] 3만5천

책≫ 185).

28) 1948년 1월 1일자 인구를 281,000명으로 조사한 미국 측 자료가 있어 참고된

명에서 5만여 명에 이르는 인원은 거의 모든 가호에서 1명씩은 집회에 참석했음을 입증하여 준다.[29]

Ⅳ. '3·1사건대책위원회'와 3·10총파업

3월 1일 오후 2시께 기념행사가 끝난 후 군정당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가받지 않은 가두시위가 시작되었다. 제주북국민학교를 나온 시위행렬은 두 갈래로 나뉘어 한 대열은 미군정청과 경찰서가 있는 관덕정 광장을 거쳐 서문통으로, 다른 한 대열은 감찰청이 있는 북신작로를 거쳐 동문통으로 이어졌다.

관덕정을 거쳐서 서문통으로 시위대가 빠져나간 뒤 관덕정 부근에 있던 기마경찰의 말굽에 어린아이가 다치는 사태가 일어났다. 흥분한 관람 군중들이 돌을 던지며 항의하자 곧바로 관덕정 부근에 포진하던 무장경찰이 총격을 가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구경나온 민간인 6명이 숨지고, 6명이 중상을 입었다. 희생자 가운데는 국민학생과 젖먹이를 안고 있던 20대 여인 등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사망자의 신원은 허두용(15세, 제주북교 5년), 박재옥(21세, 여), 오문수(34세), 김태진(38세), 양무봉(49세), 송덕수(49세)로 밝혀졌다.[30]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 당시 3·1투쟁기념준비위원회와 제주도 민

다. National Economic Board, USAMGIK, South Korean Interim Government Activities, No.32, May 1948.

29) 이러한 제주도의 전계층적, 거도적인 항쟁의 사례로는 19세기 말 연이어 일어난 제주도민의 봉기를 들 수 있다. 대표적인 항쟁은 1898년 봉기('방성칠란'), 1901년 봉기('이재수란')로서 이에 대한 연구 성과로는 다음의 글이 참고된다. 조성윤, 1986 <1898년 제주도 민란의 구조와 성격-남학당의 활동과 관련하여-> ≪한국 전통사회의 구조와 변동≫ (문학과지성사); 강창일, 1991 <1901년의 제주도민 항쟁에 대하여> ≪제주도사연구≫ 1; 박찬식, 1996 <'房星七亂'과 '李在守亂'의 주도세력에 관한 새로운 자료> ≪탐라문화≫ 16

30) 발포사건의 상세한 전말에 대해서는 ≪4·3은 말한다≫ 1, 266~285;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107~113을 참조할 것.

전 임원을 지낸 고창무는 1960년 4·19혁명 직후 다음과 같이 회고한 바 있다.

> 3·1사건 : 이 평화의 섬이 피비린내 나는 3·1사건이란 어떤 것이며 또 어떻게 진전되었던가. 1947년 3월 1일 다시 말하면 해방 후 두 번째 맞이하는 3·1기념행사는 도민으로서는 누구의 간섭도 없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임에 성스러운 이 날을 기념함은 또 숭고한 의무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경찰당국은 擧島的인 기념행사는 허가할 수 없다느니 부락 단위로만 기념식을 거행하라느니 생트집을 부려 3월 1일 아침까지도 결정을 못 짓고 옥신각신하던 중 前年의 기념식장이었던 제주북국민학교 운동장에는 3만 이상의 군중이 입추의 여지도 없이 운집하니 경찰 당국은 그때야 부득이 집회를 허가하는 졸렬한 조치를 취하니 적지 않게 심리적 자극을 주었으나 관용성 있는 도민은 순조롭게 기념식을 끝내고 축하행렬로 해방의 환희에 넘치고 있을 때 천만 의외로 불행히도 기마순경은 아동을 부상시키고 아무런 말도 없이 질주하는 오만불손한 태도에 격분한 구경 군중(시위 군중 아님)에서 투석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런 일을 기다리기나 한 듯이 경찰은 망루에서 실탄을 발사하여 수명의 사망자를 내고 겁에 질려 도피하는 군중을 향하여 실탄발사를 계속하고 사고현장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제주도립병원 앞에서는 그곳에 있던 순경의 발사에 의하여 수명의 부상자를 내었으니 이것이 3·1 사건의 시초이었다.[31]

3월 1일 발포사건 이후 남로당 제주도당은 3월 5일 제주읍당과 함께 상무위원회 연석회의를 소집하였다. 안세훈 · 김용관 · 김행백 · 이시형 · 김영홍 등 지도부가 모인 이 자리에서 대정면당의 건의를 토대로 총파업의 투쟁방침을 결정하였다.[32] 또한 ① 발포책임자 강동

31) ≪조선일보≫ 1960. 7. 16

32) 제주지방심리원 판결문(서기 1947년 刑公第156號). 총파업 투쟁방침은 대정면당 조직부장 김달삼의 건의사항으로 보인다. 3월 1일 집회 직후 소집된 대정면당 간부회의에서는 평화적인 항의 표시의 수단으로 전도 총파업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조직책 김달삼을 연락원으로 도당 본부에 파견하여 이를 건

효 및 발포한 경찰관을 살인죄로 즉시 처형하여라, ② 피살당한 동포의 유가족의 생활을 전적으로 보장하며 피상자에게 충분한 치료비와 위로금을 즉시 지급하라, ③ 경찰관계의 수뇌부는 즉시 인책사임하라, ④ 3·1사건에 관계되어 피검된 인사를 즉시 무조건 석방하라, ⑤ 경관의 무장을 즉시 해제하라, ⑥ 경찰에서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즉시 축출하라는 등의 요구조건을 의결하고, 이러한 조건이 관철될 때까지 ① 미군정의 여하한 명령에도 불복함, ② 일체의 세금을 불납함을 사수한다는 결의를 보았다. 요구조건이 관철하기 위해 각 직장별로 파업단을 조직하고 3월 10일 정오를 기해 총파업을 단행할 것을 결의했다.[33]

총파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면당에서는 당내 투쟁조직으로 3월 5일 '3·1사건투쟁위원회'를 비밀리에 조직하였다. 도당 투쟁위원회에는 표면화되지 않은 당원으로써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지도부·선전부·구호부·조사부 등의 인원을 배치하였다. 위원장에는 김용관, 조직부장 이시형, 선전부장 김용해, 구호부장 김영홍 등이 선정되었다.[34]

각 면당별로도 투쟁위원회가 조직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판결문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는 서귀면당 투쟁위원회가 유일하다. 남로당 서귀면당 간부들은 3월 10일 이도백의 집에 모여서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민청부장 김은환과 회의를 가져서 3·1사건투쟁위원회의 조직과 파업 단행 및 파업단 조직에 대한 지도 방침을 놓고 토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투쟁위원회의 부서 조직이 결정되었는데, 이도백이 지도부장을, 송태삼이 조직부장을 담당하였음이 확인된다.[35] 이도백은 3월

의하도록 하였다(이운방, 1990 <제주도 인민위원회 결성과정－대정면을 중심으로－> ≪4·3장정≫ 1, 86). 남로당 제주도위원회가 각 읍·면위원회 앞으로 보낸 문건에도 제주도 상무위원회와 제주읍위원회 상무위원회 간의 연석회의에서 "대정면의 건의문을 토대로 하여 투쟁방침을 결정하였다"고 명시하였다. 이 날 결정된 투쟁방침의 내용은 앞 ≪제주항쟁≫ 189~195에 수록되어 있다.

33) 위 김용해의 판결문

34) 제주지방심리원 판결문(서기 1947년 刑公第156號)

14일 송태삼의 집에서 열린 모임에서 투쟁위원회의 재편성에 대한 토의를 거쳐서 위원장으로 결정되었다.[36]

〈표 10〉 남로당 3·1사건투쟁위원회 지도부 명단

읍·면	직책	이름	나이	출신지	직업	항일 경력
제주도 (전체)	위원장	김용관	37	봉개	하귀교교장	일본에서 전협 활동
	부위원장					
	조직부장	이시형				
	선전부장	김용해	47	하귀	교사	일본에서 전협 활동
	구호부장	김영홍	42	일도	무직	
서귀면	위원장	이도백	38	서귀	정미업	서귀포 독서회 사건(1935)
	조직부장	송태삼	37	서귀	농업	서귀포 독서회 사건(1935)

※ 관련 판결문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나이는 1947년 기준

조직 방침에서 명시한 부서별 책임 과제는 아래와 같다.[37]

○ 지도부 : 항상 당 상무위원 역할을 하고 전반적 입장에서 문제를 취급하고 각 부의 활동을 지도통제하며 투쟁방침을 세운다.
○ 조직부 : 합법적인 대책위원회 구성, 각 직장의 파업단 조직, 각 직장 파업단을 망라한 읍·면적 파업단의 조직, 부락단위의 대책위원회의 구성, 파업에 대한 전체적 지도.
○ 선전부 : 투쟁 슬로건의 구체화, 3·1사건 진상폭로 선전사업
○ 구호부 : 발포구원 기금 캄파의 지도, 유가족과 피상자에 대한 구호사업, 사회장의 준비와 지도, 3·1사건 투쟁기금의 확립
○ 조사부 : 3·1사건의 진상조사, 피해자에 대한 조사, 경찰 내부의 조사, 반동 진영의 동향 조사, 각 방면의 투쟁상황에 대한 조사.

그리고 당외 표면 투쟁조직으로서 '3·1사건대책위원회'를 합법적으로 읍·면·리·구에 구성하도록 하였다. 이런 방침에 따라 대책

35) 제주지방심리원 판결문(서기 1947년 刑公第94號; 서기 1947년 刑公第122號)
36) 제주지방심리원 판결문(서기 1947년 刑公第94號)
37) <남조선노동당 제주도위원회가 각 면위원회 읍위 각 야체이카 앞으로 보낸 3·1사건대책투쟁 문건> (앞 ≪제주항쟁≫ 190)

위원회의 구성원은 대중단체의 인사로서 민전 산하 각 단체 및 각 직장 대표로 구성하였다. 지도부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총무부·조사부·교섭부·연락부·선전부·구호부 등으로 조직되었다. 그리고 각 면·리에까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38] 이에 따라 3월 9일 안세훈·최남식·박영훈·김정로·김용해 등 2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3·1사건대책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위원장에는 한독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지낸 홍순용을 내세웠다. 판결문에 의하면 조사부장은 고봉효와 현호경이, 재무부장은 김두훈이 담당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어서 각 면·리별, 직장별로 대책위원회가 조직되어 갔다. 판결문을 통해 확인되는 조직 과정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 11〉 면·리별, 직장별 3·1사건대책위원회 조직 상황

면/직장	조직 상황	비고
제주읍	3. 9. 제주읍내 김두훈 자택, 제주읍내 3·1절 불상사건대책위 조직 3. 10. 외도리 1구공회당, 외도리대책위 구성 3. 12. 도두초등학교, 도두리 1구대책위 조직	
조천면	3. 13. 조천국민학교 강당, 5백 명 집회, 조천면대책위 구성 3. 10. 북촌국민학교, 리민 2백 명 집합, 북촌리대책위 조직 3. 13. 신흥리대책위 조직	
구좌면	3. 10. 구좌면사무소 앞 공회당, 구좌면대책위 조직 3. 12. 김녕리 향사, 150명 주민 집회, 김녕리대책위 조직 3. 14. 연평국민학교, 3백 명 집회, 연평리대책위 구성(위원장 차두옥)	
남원면	3. 14. 남원면사무소, 민청원·구장·관공서원 집회, 남원면대책위 조직 3. 15. 위미국민학교, 위미리대책위 조직	
중문면	3. 10. 중문국민학교, 도 민청의 지령, 중문면대책위 조직	
안덕면	3. 11. 인민위원장 고군칠 자택(감산리), 안덕면대책위 조직 3. 12. 화순리 민청사무소, 화순리대책위 조직 3. 12~13. 창천리 향사, 창천리 대책위 조직 3. 13. 동광국민학교, 안덕면대책위 동광리분회 조직	
대정면	3. 5. 영수여관, 3·1준비위를 대정면대책위로 개편 조직	
한림면	3. 12. 한림면사무소, 민청위원장 김행돈의 지시, 한림면대책위 조직	
직 장	3. 10. 제주도청, 도청직원 70명 집회, 제주도청 대책위 개최 3. 10. 제주주정공장, 대책위 조직(의장 박기만) 3. 11. 제주읍 운수회사, 대책위 조직(위원장 고창잠) 3. 12. 제주세무서, 대책위 구성	

38) 위와 같음.

대책위원회와 투쟁위원회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대위는 합법적이고 투위는 비합법적 조직이며 대위로서는 절대로 파업단을 지도할 수 없으며, 투위만이 파업단을 지도한다. 대위는 강력한 교섭전과 구호운동에 중점을 둔다. 투위로서도 교섭전과 구호운동을 한다"고 경계선을 확실히 설정하여 놓았다.[39]

3·1투쟁위원회와 대책위원회는 미군정과 경찰의 발포 실상을 폭로하며 총파업과 희생자 구호금 모집에 돌입했다. 3월 10일 제주도청을 시발로 총파업이 이어졌다. 3월 11일에는 제주도 식량검사서에서 제주읍내 각 직장 대표자들이 모여서 '제주읍 총파업단 공동투쟁위원회'가 조직되었다.[40] 이러한 공동투쟁위원회는 제주읍뿐만 아니라 각 면에도 조직되었고, 직장별로도 개별 파업단과 공동투쟁위원회가 조직되었다. 도청 등 관공서 23개소, 중등학교 13개교, 국민학교 92개교, 통신기관 8개소, 교통기관 7개소, 금융기관 2개소, 상사회사 및 공장 15개소 등 도내 166개 단체에 41,211명이 파업에 들어갔고,[41] 현직 경찰관까지 파업에 동참했다.[42] 직장별로 파업단이 구성되고 파업에 들어간 상황을 판결문에 의거해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39) <남조선노동당 제주도위원회 3·1사건투쟁위원회 지도부가 각 읍·면 투위에 보낸 지시 문건> (위 ≪제주항쟁≫ 207)

40) 제주지방심리원 판결문(서기 1947년 刑公第133號); ≪제주신보≫ 1947. 3. 14

41) 위 김용해 판결문; 濟州道警察局, 1990 ≪제주경찰사≫ 290. ≪제주경찰사≫에는 각 부문별 직장의 파업참여자 인원까지 밝혀놓았으나, 판결문에는 파업 참여 직장의 숫자만 기록되어 있다. ≪제주경찰사≫에 적힌 파업 참여 직장의 수와 김용해의 판결문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건대, ≪제주경찰사≫의 인원 통계는 당시 원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42) 중문지서장 양경한 등의 파업 및 사직 사태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제주지방심리원 판결문(서기 1947년 刑法 第212號) 참조.

〈표 12〉 직장별 파업단 구성 및 파업 상황

직장	파업 상황	집 계
관공서	제주도청/남제주군청/읍·면사무소/세무서/경찰지서	23개기관 515명
중등학교	농업중/오현중 등 읍·면별 각 학교	13개교 3,999명
국민학교	읍·면별 각 학교	92개교 35,861명
통신기관	우체국	8개소 136명
교통기관	운수회사	1업체 121명
금융기관	식산은행/금융조합/어업조합	8개소 36명
상사·공장	주정공장/전분공장/수력발전소	15개소 542명
읍·면별	공동파업단	
기 타	이발업	

※ 관련 판결문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집계는 <김용해 판결문>과 ≪제주경찰사≫를 인용하였음.

각 면과 마을, 직장 단위로 구성된 3·1사건대책위원회는 파업 전개와 함께 적극적인 항의 집회 및 시위를 전개하기도 했다. 3월 15일을 전후하여 조천면·중문면·애월면 등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열려 파업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면민들이 가두시위에 나서기도 했다(〈표 13〉 참조). 특히 중문면에서는 경찰 중문지서에 수감된 대책위원회 간부의 석방을 요구하는 면민들의 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발포로 7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43]

〈표 13〉 읍·면별 항의 집회·시위 상황

읍·면	상황			참석인원 (최소~최다)
	날짜	장소	특징	
조천면	3. 13~14	조천국민학교	집회를 통해 조천면 3·1대책위 조직, 가두 시위행렬	2,000~3,000
중문면	3. 15	중문국민학교	중문면 3·1대책위 주최 가두 시위행렬	2,000~3,000
	3. 17	중문중학원	중문지서 피검자 석방 요구 시위 경찰의 발포로 7명 부상	700
대정면	3. 10	대정국민학교	대정면 각 직장원·대정교 생도 등, 대정면 공동파업단 구성 후 가두시위	200

43) ≪제주신보≫ 1947. 3. 24

한림면	3. 15	고산국민학교	민청원·우편국원·생도 등, 가두시위	100
애월면	3. 15	애월국민학교	면내 각 직장원·학생·면민, 총파업공동투쟁위원회 조직 결의 후 가두시위	1,000~2,000
합 계				6,000~9,000

※ 관련 판결문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V. 집회·총파업 주도세력의 사회적 성격과 운동 방향

발포 사태 이후 중앙 미군정청은 3월 8일 합동조사반을 파견하여 사건의 진상을 조사했으나, 공식적인 진상 발표는 전혀 없이 13일 돌아갔다. 이어 3월 14일 미군정 경무부장 조병옥이 내도하여 총파업을 분쇄하여 갔다. 미군정은 3월 15일 전남·북 응원경찰 222명, 3월 18일 경기도 응원경찰 99명을 증파해 총파업에 강경 대응하였다. 조병옥은 총파업이 어느 정도 진정되자 3월 19일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경찰의 발포를 정당방위로 항변하고, 북조선과의 통모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여 제주도를 '빨갱이 섬'으로 조장하였다. 이 사건 직후 미군정 보고서에는 "제주도는 70%가 좌익정당에 동조적이거나 좌익정당에 가입해 있을 정도로 좌익의 본거지"라고 기록하여 미군정의 일관된 제주도 인식을 엿볼 수 있다.[44] 미군정은 발포 사태에 대해 총파업으로 대응한 제주도민의 저항을 미군정 자체에 대한 도전 행위로 규정하고 '공산주의자'에 의해 조종을 받는 행위로 규정해 나간 것이다.

3월 15일부터 집회 및 파업 주모 혐의로 민전 간부들의 연행을 시작으로 4월 10일까지 500여 명을 검속했다. 검속된 자들은 4월 3일부터 군정재판에 회부되었다. 1947년 4월 14일에는 군정재판이 조선

44) 주한미육군사령부(Headquarters of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HQ USAFIK) 일일정보보고(G-2 Periodic Report), 1947년 3월 20일

인 법정으로 이관되어 3·1사건 관련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제주지방심리원에서 관할하게 되었다. 결국 1947년 4월 3일부터 시작된 3·1사건 공판은 5월 23일 일단락되었다. ≪제주신보≫ 기사에 따르면, 형이 내려진 사건 관련자는 체형 52명, 집행유예 52명, 벌금형 56명, 기타 기소유예, 불기소 등 도합 328명이었다.[45]

그러나 실제 5월 23일까지의 현존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재판에 회부되어 형을 받은 사람은 총 162명이며, 징역형 40명, 집행유예 47명, 벌금형 75명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3·1사건 공판이 5월 23일 일단락되었지만, 이후 계속된 미군정의 검거령에 따라 검속된 상당수의 사람들이 3·1사건과 연루되어 형을 받았다. 현존 판결문을 검토하면, 5월 23일 이후로부터 1947년 말까지 계속된 3·1사건 관련 수형자는 83명(징역형 19명, 집행유예 21명, 벌금형 43명)에 이른다. 결국 지금까지 확인된 현존 판결문 자료에 근거한다면, 3·1사건 발발 이후 1947년 말까지 3·1사건 수형자는 총 245명에 이른다.

이들은 3·1집회 및 3·10총파업을 선도하였던 자들로서, 이들의 사회적 성격 및 운동의 지향점 등을 고찰하는 것은 3·1사건의 전체적 성격 및 4·3항쟁의 원인을 이해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들 3·1사건의 주도세력에 대한 총체적 일람표를 작성하여 구체적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최근까지 3·1사건의 대체적 면모는 밝혀져 있으나,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소홀하게 다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주도세력에 대하여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해방공간기 제주도 사회운동의 성격을 더욱 뚜렷이 하고자 한다.

---

45) ≪濟州新報≫ 1947. 5. 26

〈표 14〉 3·1집회 및 총파업 관련 재판회부자 일람표 (1947년도 재판)

번호	성명	주거	직업	나이	활동 내용(3·1사건)	형량	관결연월일
1	梁成益	한림 한림	부면장	40	한림면파업투쟁위원장	벌금1만원	0417
2	金容哲	애월 하귀	농업	21	애월 집회시위(3.15) 참가	벌금3천원	0417
3	金泰孝	애월 곽지	농업	26	구엄교집회, 3·1투쟁방침 토의	벌금3천원	0417
4	金泰昞	애월 곽지	농업	28	애월 집회시위(3.15) 참가	벌금2천원	0417
5	洪性椿	제주 삼도	교원양성소	22	교원양성소 동맹휴학	벌금4천원	0417
6	姜漢鐘	제주 오라	교원양성소	21	교원양성소 동맹휴학	벌금2천원	0417
7	金明赫	제주 삼도	농업학교교유	34	제주읍 중등학교 교원 파업	벌금3천원	0417
8	金洪彦	서귀 서귀	회사원	25	발포책임자 처벌 촉구 비라 작성	벌금5천원	0418
9	洪舜赫	서귀 서귀	교원	23	서귀면 교원조합 파업	벌금3천원	0418
10	李道伯	서귀 서귀	정미업	38	남로당 서귀면위 3·1투쟁위 조직	벌금3천원	0418
11	金仁岐	구좌 연평	농업	24	우도 3·1기념행사 거행	벌금5천원	0418
12	李千根	구좌 연평	농업	43	우도 3·1기념행사 거행	벌금1천원	0418
13	李淳澤	구좌 연평	농업	21	우도 3·1기념행사 거행	벌금3천원	0418
14	尹聖秋	대정 하모	무직	30	남로당 대정면 임시대회 참여	벌금1만원	0418
15	林才三	성산 성산	직공	28	성산포 직장 파업 주도	벌금4천원	0418
16	吳正赫	대정 일과	직공	25	모슬포 직장 파업 주도	벌금5천원	0418
17	左南生	애월 곽지	농업	27	애월면 파업단 공동투쟁위 참여	벌금3천원	0418
18	鄭己生	제주 도두	농업	29	서부학교보호자 3·1대책위 참여	벌금6천원	0418
19	梁仁洙	안덕 화순	부면장	37	안덕면 공동파업단 조직	벌금3천원	0418
20	高漢吉	표선 표선	농업	21	군정경찰 비방하는 격문 작성	벌금5천원	0418
21	金時範	조천 조천	조천면장	58	조천면 3·1대책위 조직	벌금3천원	0418
22	李昌銀	대정 하모	잡화상	26	민전 대정면위원회 결성식 참가	벌금2천원	0418
23	金成閏	대정 하모	잡화상	29	대정면 3·1기념행사 참석	벌금2천원	0418
24	鄭斗玉	표선 표선	국교교원	25	표선면 동맹파업투쟁위 조직	벌금3천원	0418
25	尹國宣	서귀 서귀	남제주군군속	43	남제주군청 동맹파업 주도	벌금3천원	0419
26	韓洪燮	제주 삼양	국교교장	32		벌금2천원	0419
27	趙昌浩	애월 애월	금융조합서기	26	애월읍 직장파업 주도	벌금3천원	0419
28	高奉孝	제주 일도	잡화상	27	제주도 3·1대책투쟁위 조사부장	벌금1천원	0419
29	金奉鉉	제주 삼도	오현중학교원	29	제주읍 중등학교 교원 파업 주도	벌금2천원	0419
30	高泰烋	중문 중문	농업	33	경찰관 동맹배척 주도	벌금3천원	0421
31	高禮龜	제주 삼도	제주도도기수	36	제주읍 파업단공동투쟁위 위원장	벌금4천원	0421
32	康景珍	서귀 보목	전 순사	24	경찰 중문지서 파업 참여	벌금3천원	0422
33	康錫祚	서귀 보목	전 경사	26	경찰 중문지서 파업 참여	벌금3천원	0422
34	韓泰和	서귀 보목	전 순사	23	경찰 중문지서 파업 참여	벌금3천원	0422
35	梁慶漢	남원 태흥	전 경사	25	경찰 중문지서 파업 주도	벌금2천원	0422
36	金東河	중문 중문	농업	43	중문면 직장파업 주도	벌금5천원	0422
37	李達千	중문 중문	농업	51	중문리 3·1대책위 위원장	벌금5천원	0422
38	尹永珍	중문 강정	농업	20	중문면 직장파업 주도	벌금5천원	0422
39	金元謙	서귀 서귀	부면장	41	서귀면사무소 파업 주도	벌금3천원	0423
40	金士英	남원 위미	농업	33	위미리 3·1대책위 조직	벌금3천원	0423

41	金秉珍	남원 위미	국교교원	32	남원면 3·1대책위 조직	벌금1천원	0423
42	吳斗圭	서귀 서귀	농업	21	무허가집회, 군정경찰 배척	벌금2천원	0424
43	金承泰	애월 곽지	농업	22	애월교 항의집회 주민참여 선동	벌금2천원	0424
44	徐方吉	서귀 서귀	농업	29	무허가집회, 군정경찰 배척	벌금1천원	0424
45	康景俊	서귀 보목	국교교원	43	교직원 파업 주도	벌금1천원	0425
46	崔斗吉	제주 이도	국교교원	31	동남북국민학교 파업투쟁위 조직	벌금5천원	0425
47	金漢保	제주 이도	오현중학교사	27	제주읍중등학교 파업투쟁위 조직	징역6월/집유	0428
48	張珍奉	안덕 창천	농업	36	안덕면 3·1대책위 조직	징역8월	0428
49	姜昌順	애월 애월	애월면서기	31	애월면 총파업공동투쟁위 조직	징역6월/집유	0428
50	愼英姬	제주 삼도	국교교원	21	제주읍국민학교 파업투쟁위 조직	벌금3천원	0428
51	金達彬	제주 일도	국교교원	30	동남북국민학교 파업투쟁위 조직	벌금5천원	0428
52	金德訓	제주 일도	국교교장	39	동남북국민학교 파업투쟁위 조직	벌금5천원	0428
53	邊鍾煥	대정 하모	무직	20	민전 대정면위원회 참가	징역6월/집유	0428
54	徐成辰	대정 상모	우편국서기	20	대정면 공동파업단 조직	징역6월/집유	0428
55	金洪律	애월 구엄	하귀중학교원	25	애월면 파업단공동투쟁위 조직	징역6월/집유	0428
56	李漢亭	구좌 김녕	농업	38	김녕리 3·1대책위 조직	징역6월/집유	0428
57	姜淳現	제주 이도	오현중학교원	30	제주읍 직장파업단 공투위 조직	징역6월/집유	0428
58	李贊九	제주 용담	국교교원	30	제주읍국민학교 파업투쟁위 조직	징역6월/집유	0428
59	尹炳仁	애월 곽지	농업	22	애월교 항의집회 주민참여 선동	징역6월/집유	0428
60	文德七	제주 화북	국교교장	39	제주읍동부국교 파업투쟁위 조직	징역6월/집유	0428
61	韓成泰	제주 삼도	운전수	36	운수회사 3·1대책위 조직	징역6월/집유	0428
62	金完培	조천 북촌	농업	35	북촌리 3·1대책위 조직	징역8월/집유	0428
63	李雲玉	한림 옹포	국교교원	33	한림면 직장파업단 공투위 조직	징역4월/집유	0428
64	金昌淳	제주 삼도	농업학교교원	34	제주읍 중등학교 교원 파업 주도	징역5월/집유	0428
65	高奉湜	제주 일도	국교교원	23	제주읍 학교파업공투위 조직	징역4월/집유	0428
66	高行七	한림 고산	농업	33	기념식 참가, 파업 선동	징역4월/집유	0428
67	金商殷	제주 이호	국교교원	23	제주읍서부국교 파업투쟁위 조직	징역6월/집유	0428
68	高瑞鐘	제주 일도	전 교원	25	제주읍국민학교 파업투쟁위 조직	징역6월/집유	0428
69	車斗玉	구좌 연평	농업	53	연평리 3·1대책위원장	징역7월/집유	0428
70	宋京郁	안덕 덕수	농업	55	안덕면 3·1대책위 조직	징역5월/집유	0428
71	李成學	제주 건입	국교교원	26	제주읍국민학교 파업투쟁위 조직	징역6월/집유	0428
72	韓宇燮	제주 건입	오현중학생	20	3·1기념행사 참석, 학생 선동	징역8월/집유	0428
73	黃翊吉	제주 삼양	국교교원	29	제주읍국민학교 파업투쟁위 조직	징역6월	0428
74	金河龜	제주 삼양	국교교원	25	제주읍국민학교 파업투쟁위 조직	징역6월	0428
75	許起龍	대정 상모	농업	33	대정면 3·1대책위 조직	징역10월	0428
76	金起鐘	제주 화북	국교교원	22	화북교 동맹파업 단행	징역6월	0428
77	文達華	대정 하모	금융조합서기	24	대정면 공동파업단 조직	징역6월	0428
78	吳東鶴	남원 위미	농업	45	남원면 3·1준비위원장	징역8월	0428
79	宋泰三	서귀 서귀	농업	37	서귀면 남로당 3·1투쟁위 조직	징역8월	0428
80	金性秋	중문 중문	농업	41	중문면 3·1대책위 조직	징역10월	0428
81	金龍寬	애월 하귀	국교교원	37	남로당 제주도당 3·1투쟁위원장	징역6월	0428
82	李廷奎	한림 귀덕	국교교원	24	한림면 파업단공투위 조직	징역8월	0428
83	文基好	애월 구엄	국교교원	23	구엄국민학교 파업 단행	징역8월/집유	0428

84	吳泰柄	서귀 동홍	국교교원	25	서귀면 전교동맹파업단 조직	징역7월	0428
85	朴新元	한림 고산	국교교원	23	한림면 파업단 결성대회 참석	징역6월	0428
86	韓晳哲	서귀 서귀	북국교원	22	서귀면 국민학교 파업단 조직	징역6월	0428
87	金在殷	제주 일도	국교훈도	25	화북교 파업단 조직	징역6월	0428
88	姜昌祐	제주 삼도	농업학교교사	27	제주도 총파업단공투위 총무부장	징역6월	0428
89	金壬生	제주 일도	국교훈도	26	제주읍국민학교 파업투쟁위 조직	징역6월	0428
90	宋文玉	한림 고산	농업	47	무허가집회, 군정경찰 배척	징역10월	0428
91	金溶元	제주 용담	교원	37	제주읍 중등학교 교원 파업 주도	징역6월	0428
92	李君實	중문 중문	농업	22	3·1기념식 후 시위 전개	징역6월	0428
93	許斗文	제주 오라	국교교원	23	제주읍국민학교 파업투쟁위 조직	징역1년	0428
94	金商年	제주 외도	국교교원	23	제주읍서부국교 파업투쟁위 조직	징역5월/집유	0428
95	梁相文	애월 신엄	국교교원	23	불온표어 작성	징역6월/집유	0428
96	高冠浩	대정 상모	국교교원	24	대정면 공동파업단 조직	징역4월	0428
97	禹聖大	대정 상모	국교교원	23	대정면 공동파업단 조직	징역4월	0428
98	李和澤	애월 애월	애월면서기	40	애월면사무소 동맹파업	징역6월/집유	0428
99	金奉柱	남원 위미	재봉업	27	위미리 3·1대책위 조직	징역4월/집유	0428
100	姜熙舜	안덕 감산	농업	44	안덕면 3·1대책위 조직	징역5월/집유	0428
101	金永鴻	제주 일도	무직	42	제주도 3·1대책위 조직	징역6월	0428
102	姜大衡	대정 상모	국교교원	30	대정면 공동파업단 조직	징역4월	0428
103	洪戊生	애월 광령	국교교원	26	하귀교 총파업 단행	징역6월/집유	0428
104	金德賢	한림 한림	이발업	40	이발업자 동맹파업 단행	징역4월/집유	0428
105	梁柄淳	제주 일도	이발업	28	이발업자 동맹파업 단행	벌금3천원	0429
106	裵斗鳳	제주 삼도	농업	34	남로당 입당, 무허가집회	징역8월	0429
107	金二煥	제주 삼도	무직	39	도 부녀동맹위원장, 시위참가	징역6월/집유	0430
108	康鳳儀	구좌 김녕	국교교원	26	구좌면 3·1대책위 조직	징역6월/집유	0430
109	鄭相洙	제주 일도	주정공장공원	24	주정공장 총파업 주도	징역4월/집유	0430
110	邵在祐	제주 건입	주정공장공원	23	주정공장 총파업 주도	징역8월/집유	0430
111	朴文玉	제주 건입	주정공장공원	25	주정공장 총파업 주도	징역8월/집유	0430
112	玄川五	제주 건입	주정공장공원	32	주정공장 총파업 주도	징역8월/집유	0430
113	姜哲守	제주 일도	전 교원	20	3·1기념식 시위	징역6월/집유	0430
114	金乙生	서귀 서귀	국교교원	23	서귀북교 교사 총파업 주도	징역6월/집유	0430
115	金永昊	구좌 세화	농업	22	집회 개최, 경찰관 배척	징역6월	0430
116	朴元吉	구좌 덕천	농업	33	집회 개최, 경찰관 배척	징역6월	0430
117	姜元吉	구좌 세화	농업	23	구좌면 3·1기념식 거행	징역6월	0430
118	李運芳	대정 하모	농업	39	대정면 3·1대책위 조직	징역10월	0430
119	李辛祐	대정 상모	주류소매상	46	대정면 3·1대책위 조직	징역6월	0430
120	金平遠	조천 조천	농업	33	조천면 항의시위 주도	징역5월	0430
121	康彭聖	중문 강정	농업	39	중문면 3·1대책위 총무부장	징역7월	0430
122	李昌旭	제주 용담	용담리구장	34	제주읍 3·1대책위 조직	징역8월	0430
123	梁致明	제주 화북	국교교원	24	도 전국민학교 총파업 결의	징역6월	0430
124	金官振	애월 애월	애월중교원	22	애월읍 각 직장 총파업 단행	징역6월/집유	0430
125	鄭斗杓	제주 일도	교원	27	제주읍국민학교 파업투쟁위 조직	징역6월/집유	0430
126	李寶澤	중문 중문	중문면서기	27	중문면 3·1대책위 조직	징역7월	0501

127	趙錫斗	대정 보성	농업	30	대정면 항의집회 주도	징역6월/집유	0502
128	高昌岑	제주 건입	자동차운전수	33	운전회사 노동자 총파업 주도	징역6월/집유	0502
129	高聖春	제주 이도	농업학교교유	30	교직원 총파업 주도	징역8월	0502
130	文武炫	구좌 종달	국교교원	44	구좌면 국민학교교원파업단 조직	벌금3천원	0503
131	高昌武	제주 삼도	금융조합이사	43	3·1투쟁준비위 개최	벌금3천원	0506
132	李承祚	중문 중문	중문중학원장	31	중문면 3·1대책위 위원장	징역10월/집유	0507
133	安斗植	중문 중문	중문면서기	27	중문면 3·1대책위 조직	징역6월/집유	0507
134	高斗玉	중문 중문	농업	27	중문면 3·1대책위 조직	징역1월/집유	0507
135	金榮斗	한림 귀덕	국교교원	23	한림국민학교 파업 단행	벌금3천원	0508
136	金應樞	제주 용담	세무서기수	35	제주세무서 직원 총파업 주도	벌금1천원	0508
137	金斗壎	제주 삼도	운송업	45	제주도 3·1대책위 재무부장	징역6월/집유	0508
138	康萬壽	서귀 서귀	농업	33	서귀면 남로당 3·1투쟁위 재조직	벌금3천원	0509
139	金鏞勛	성산 고성	국교교원	23	제주도교원조합 성산면지부 조직	벌금2천원	0509
140	鄭技卓	성산 고성	국교교원	25	제주도교원조합 성산면지부 조직	벌금2천원	0509
141	李東俊	한림 고산	국교교원	26	한림면 직장파업단 공투위 조직	벌금4천원	0509
142	李貞淑	제주 일도	무직	30	부녀동맹, 군정 항의성명서 작성	벌금3천원	0509
143	高眞姬	제주 이도	무직	30	부녀동맹, 군정 항의성명서 작성	징역5월/집유	0509
144	秦亥生	대정 하모	미곡상	37	대정면 3·1대책위 조직	징역6월	0510
145	金如文	안덕 귀덕	한림면서기	34	한림면 직장파업단 공투위 조직	벌금3천원	0514
146	梁玩錫	안덕 화순	교원	21	안덕면 공동파업단 조직	벌금3천원	0514
147	高君七	안덕 감산	농업	57	안덕면 3·1대책위 조직	벌금3천원	0514
148	申燦晧	한림 한림	한림면서기	27	한림면 3·1대책위 조직	벌금2천원	0514
149	金行伯	제주 삼도	이발업	42	이발업자 총파업 단행	벌금5천원	0514
150	夫性立	제주 일도	우체국주임	36	제주읍파업공투위 조사연락부장	벌금2천원	0514
151	吳達文	서귀 동홍	서귀리민청부장	37	군정 항의 비라 작성	벌금1천원	0515
152	梁時佑	서귀 서귀	도시혐장고문	22	군정 항의 비라 작성	벌금1천원	0515
153	姜寅化	서귀 서귀	이발업	45	3·1기념 직장위원회 조직	벌금1천원	0515
154	朴性善	한림 금악	농업	55	한림면 3·1대책위 조직	벌금4천원	0515
155	朴光玉	조천 조천	靴수선	26	조천면 3·1대책위 조직	벌금2천원	0515
156	申斗元	제주 외도	농업	31	외도리 1구 3·1대책위 조직	벌금3천원	0515
157	申重湜	제주 일도	제주세무소 고문	25	제주세무서 3·1대책위 조직	벌금3천원	0515
158	金泰奉	서귀 서귀	중학교교유	24	서귀면 교원조합 파업단 조직	징역8월	0515
159	梁寬杓	한림 한림	농업	38	한림면 3·1기념행사 준비위 조직	벌금2천원	0519
160	吳亨澤	안덕 창천	농업	32	창천리 3·1대책위 조직	징역8월	0519
161	金利鍾	구좌 하도	교원	26	학교교원 파업 단행	벌금2천원	0520
162	玄景昊	제주 삼도	제주중학교장	54	제주도 3·1대책투쟁위 조사부장	벌금5천원	0523
163	孫凡奎	조천 신흥	민청위원장	21	신흥리 3·1불상사대책위 조직	벌금5천원	0528
164	金相勳	제주 일도	농업	59	제주읍 3·1불상사건대책위 조직	벌금1천원	0531
165	鄭相朝	제주 삼도	농업	50	제주읍 3·1불상사건대책위 조직	벌금2천원	0603
166	宋元丙	대정 보성	교원	36	안덕면 교원파업단 조직	벌금5천원	0614
167	康大錫	제주 이도	무직	25	제주도 3·1기념행사준비위 조직	벌금1천원	0624

168	吳順培	구좌 하도	농업	23	하도리 3·1기념행사 거행	징역6월/집유	0624
169	韓文玉	구좌 하도	농업	39	하도리 3·1기념행사 거행	징역8월	0624
170	康基弘	구좌 하도	농업	37	구좌면 3·1기념행사 거행	벌금2천원	0626
171	姜榮豪	성산 신산	농업	28	신산리 군정항의 집회 개최	벌금3천원	0626
172	高榮洙	제주 삼도	농업	23	3·1시위행렬 가담	벌금2천원	0628
173	李泰信	대정 하모	대정중학교원	27	대정면 직장파업단 부단장	징역8월	0628
174	鄭東日	중문 중문	교원	21	대정면 3·1기념행사 참여	징역6월	0628
175	康承律	성산 신산	국교교장	47	성산면 학교교원 총파업 주도	벌금2천원	0630
176	鄭權洙	구좌 상도	농업	25	구좌면 3·1기념행사 거행	징역6월/집유	0630
177	鄭大弘	대정 동일	농업	26	대정면 3·1기념행사 거행	징역7월	0630
178	洪南斗	한림 한림	농업	31	한림면 3·1대책위 조직	벌금3천원	0630
179	金玟植	조천 조천	농업	42	3·1대책 면민대회 주도	징역7월	0704
180	李寬植	한림 수원	농업	21	수원리, 3·1조위금 모금	징역6월/집유	0704
181	姜君鎬	서귀 서귀	농업	25		징역단기8월	0705
182	高昌祚	대정 하모	대정중학교원	21	대정면 공동파업단 조직	징역단기8월	0709
183	姜鎭熙	제주 삼도	제주농교생	18	애월·구엄리 민청 집회	징역6월/집유	0709
184	宋仁松	애월 구엄	농업	22	애월·구엄리 민청 집회	징역5월	0709
185	姜柄浩	애월 신엄	농업	23	애월·구엄리 민청 집회	벌금1천원	0709
186	趙益憲	대정 신도	농업	29	군정 항의 비라 작성	징역8월	0709
187	洪萬瀅	구좌 하도	국교교원	23	하도교 교원파업 단행	벌금1천원	0710
188	高文贊	구좌 하도	국교교원	20	하도교 교원파업 단행	벌금1천원	0710
189	金奉珍	구좌 하도	국교교원	25	하도교 교원파업 단행	벌금1천원	0710
190	玄洪湜	남원 남원	농업	32	남원면 3·1대책위 조직	벌금1천원	0714
191	金桂源	남원 의귀	농업	35	남원면 3·1대책위 조직	벌금1천원	0714
192	池文玉	안덕 화순	농업	34	3·1대책위 동광리분회 조직	징역6월/집유	0715
193	文春玉	대정 일과	농업	24	군정경찰 항의투쟁 선전	징역8월	0715
194	吳化國	구좌 하도	농업	34	군정경찰 항의비라 작성	징역10월	0718
195	吳官衡	성산 고성	농업	28	성산면 파업 선동	벌금3천원	0721
196	尹太益	서귀 서귀	수산업	32	서귀면 농업공투위 조직, 파업	벌금1천원	0721
197	林漢俊	중문 중문	중문면서기	39	중문면 3·1대책위 조직	벌금3천원	0721
198	高斗圭	서귀 서귀	농업	30	서귀면 학교파업단 조직	벌금2천원	0721
199	姜熙璨	안덕 감산	교원	25	안덕면 국민학교파업단 조직	벌금5천원	0721
200	玄武顯	서귀 서귀	국교교원	33	서귀면 학교파업단 조직	벌금2천원	0721
201	朴昌實	한림 신창	농업	46	부녀데이 집회 주도	과료9백원	0721
202	左升宅	한림 신창	농업	41	부녀데이 집회 주도	과료9백원	0721
203	姜武鍾	한림 두모	국교교원	23	교원동맹파업 주도	과료1천5백원	0721
204	高孟善	한림 판포	국교교원	26	교원동맹파업 주도	과료1천5백원	0721
205	左奉斗	한림 수원	국교교원	23	교원동맹파업 주도	과료1천5백원	0721
206	金漢哲	한림 신창	국교교원	22	교원동맹파업 주도	과료1천5백원	0721
207	梁昌仁	한림 판포	국교교원	26	교원동맹파업 주도	과료1천5백원	0721
208	金鍾時	남원 의귀	농업	26	남원면 3·1대책위 조직	벌금2천원	0722
209	金奭煥	조천 조천	무직	23	조천교 파업단위원회 조직	벌금1천원	0726
210	文老錫	조천 조천	국교교원	26	조천교 파업단위원회 조직	벌금1천원	0726

211	金汶淑	조천 조천	무직	26	조천교 파업단위원회 조직	벌금1천원	0726
212	宋玉平	성산 온평	농업	22	온평리, 3·1기념대회 참가 독려	벌금1천원	0730
213	玄長壽	성산 온평	농업	25	온평리, 3·1기념대회 참가 독려	벌금1천원	0730
214	左昌松	한림 신창	국교교원	23	신창교 교원 파업 주도	징역6월	0731
215	金膺培	제주 봉개	교원	37	제주읍 동부국교 파업단 조직	징역6월/집유	0805
216	金仁平	중문 상예	농업	38	남로당 중문면위원회 위원장	징역7월	0805
217	韓相燮	제주 건입	무직	24	제주읍 3·1 시위행렬	징역10월/집유	0805
218	吳德根	서귀 서홍	농업	30	남로당 서귀면위 3·1투쟁위 조직	벌금1천원	0807
219	玄元鶴	서귀 서귀	무직	31	남로당 서귀면위 3·1투쟁위 조직	벌금3천원	0807
220	康星烈	표선 하천	鍼灸業	29	남로당 표선면위원회 조직	징역10월	0819
221	吳龍弼	성산 성산	무직	21	표선면 각 직장 파업 단행	벌금2천원	0819
222	柳辛出	대정 인성	농업	38	대정면 3·1기념식 거행 주도	징역10월/집유	0820
223	李達君	조천 북촌	농업	28	조천면 3·1 시위행렬	징역6월	0826
224	梁厦錫	안덕 화순	농업	24	안덕면 3·1대책위 조직	징역4월	0827
225	高文秀	대정 인성	농업	41	안성리 등 3·1준비위 조직책	징역6월/집유	0829
226	梁南賓	서귀 서귀	농업	41	서귀면 3·1사건투쟁위 부위원장	징역10월/집유	0903
227	朴南燮	한림 금악	농업	22	한림면 3·1 시위행렬	징역6월/집유	0904
228	洪珠杓	구좌 상도	농업	26	구좌면 3·1 시위행렬	징역8월/집유	0906
229	梁奉權	남원 의귀	농업	27	남원면 3·1기념식 참가	징역3월/집유	0912
230	金眞一	남원 의귀	국교교원	20	남원교 교원파업 주도	징역3월/집유	0912
231	鄭昌林	남원 신흥	농업	31	남원면 3·1투쟁위 조직	징역6월/집유	0912
232	梁奉翊	안덕 화순	무직	23	안덕면 교원파업단 파업단장	징역6월	0923
233	金斗玉	대정 안성	농업	34	3·1기념일에 대정면민 동원	징역5월	0923
234	玄承均	남원 위미	의사조수	29	위미리 3·1대책위 조직	징역6월/집유	0926
235	文哲秀	제주 이도	기술양성소 생도	19	제주읍 3·1 시위행렬	벌금3천원	0927
236	姜達勳	대정 상모	대정중학교원	27	대정면 교원파업단 조직	징역6월/집유	1006
237	安世勳	조천 조천	농업	55	제주도 3·1투쟁위원회 조직	징역1년/집유	1006
238	吳鏞範	한림 명월	농업	30	한림면 3·1 시위행렬	징역6월/집유	1023
239	高斗玉	중문 중문	농업	27	중문면 3·1대책위 조직	징역8월	1031
240	金奉采	성산 신산	농업	20	성산면 3·1기념식 거행 주도	벌금2천원	1104
241	李鍾祐	대정 하모	무직	25	대정면 3·1대책위 조직	징역10월/집유	1107
242	鄭生斗	구좌 세화	농업	34	구좌면 3·1 시위행렬	벌금1천원	1127
243	姜太榮	대정 일과	농업	20	대정면 3·1 시위행렬	벌금3천원	1204
244	李昌洙	제주 일도	전 식량검사 서장	32	제주읍 공동파업투쟁위 조직	징역10월/집유	1212
245	文相岐	대정 상모	농업	33	대정면 3·1기념식 참가	벌금4천원	1226

1) 주도세력의 사회적 성격

위 일람표에 나타난 총 245명의 직업별 통계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5〉 주도세력의 직업별 통계

농업	93(명)	수산업	1	공무원	8
면장/리장/서기	12	교사 (초/중/훈도/양성소)	81	경찰	4
학생	3	회사원	5	정미업	1
상업	5	직공	2	금융조합원	3
운수/운송업	3	재봉업	1	이발업	4
침구업	1	의사조수	1	민청위원장	1
무직	14			합 계	245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도세력 245명의 직업 구성을 보면 농업 97명, 교사 81명, 공무원 24명(경찰, 면장/리장/서기 포함), 회사원 8명(금융조합원 포함), 상업 5명의 순서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해방직후 제주도민의 주업은 농업이었으므로, 주도세력 가운데 농민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주도세력의 직업 가운데 교사와 공무원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음이 주목된다. 이는 3·1집회와 3·10총파업이 이들 교사와 공무원 중심으로 전개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겠다. 특히 학생 대중의 동원을 담당할 수 있는 교사들의 역할은 집회와 총파업에 매우 중요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해방공간에서 제주사회 내의 새로운 민족교육과 근대교육에 대한 열기는 자치적으로 학교를 세우고 운영한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된다.[46] 그러므로 교사들은 지도부인 남로당에서도 조직화 작업에 가장 노력한 대상이었으며, 미군정 당국 또한 총파업을 분쇄할 때 이들 교사들의 역할을 무력화시키는 데 주력했기 때문

46) 고창훈, 1989 <앞 논문> 참조.

에 교사들이 많이 검거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면장·부면장·이장(구장)·면서기 등 마을 행정을 담당한 사람들이 많이 포함된 까닭은 3·1사건 전까지 제주사회를 마을별로 인민위원회가 자치 권력을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회사원과 직공의 비중이 크지 않은 것은 해방 직후 제주 지역사회의 직업구조가 성숙하지 못했던 실정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판결문에 나타난 이들의 소속 활동단체의 경우, 집회와 파업을 이끌었던 전체 지도부는 대체로 민전, 민청, 3·1투쟁위원회, 읍·면·직장별 주도세력은 3·1대책위원회, 직장파업단 등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남로당 지도부는 재판 과정에서 3·1사건과 직접 관련해서는 표면화되지 않고 있다.

한편 주도세력의 연령은 10대 2명, 20대 154명, 30대 74명, 40대 25명, 50대 10명 등으로 분포되어 있다. 20대가 주류로서 청년층이 집회와 총파업을 현장에서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30대 이상의 인물들 가운데에는 항일운동 경력자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이도백(38)·김시범(58)·장진봉(36)·송태삼(37)·김용관(37)·배두봉(34)·이운방(39)·이신호(46)·김평원(33)·문무현(44)·진해생(37)·한문옥(39)·유신출(38)·안세훈(55) 등이 확인된다. 이들은 대부분 항일운동의 경력때문에 전체 지도부 또는 지역 사회운동조직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주도세력의 주 활동지역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6〉 주도세력의 주활동 지역(읍·면별)

제주	조천	구좌	성산	표선	남원	서귀	중문	안덕	대정	한림	애월	계
65(명)	10	21	10	3	12	27	15	12	28	23	17	245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도의 12개 읍·면(추자도 제외) 가운데 제주읍, 대정면, 서귀면, 한림면, 구좌면, 애월면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다. 제주읍과 서귀면은 행정 관청과 학교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았으므로 집회·시위 및 총파업으로 인한 검거자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대정면은 이신호·이운방·진해생·유신출 등 항일운동 경력자들이 대거 3·1사건의 전면에서 지도 역할을 하면서 3·1 집회로부터 파업, 항의시위에 이르기까지 조직적으로 전개하였기 때문에 주도세력의 비중이 컸던 것으로 해석된다. 대체로 항일운동이 강력하게 전개되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주도세력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주도세력의 운동 방향

3·1집회가 있기 전까지 제주도 사회운동의 주축을 좌익세력이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미군정이나 조병옥 경무부장이 주장한 바와 같이 주도세력의 이념이 과연 소비에트 또는 정치권력 장악을 지향하고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1946년 8월 1일 濟州島의 道 승격 이후 미군정의 물리력 강화에 맞추어 인민위원회에 대한 탄압이 가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제주도 인민위원회는 3·1사건 전까지는 미군정과 직접 대립하지 않았다. 1946년 말 전국을 강타한 '10월 항쟁'에도 가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건대, 제주도 인민위원회 세력 지도부는 온건노선을 걷고 있었다. 동아일보(1946. 12. 21)는 "세간이나 군정이나 관청이 이구동성으로 제주의 정치계는 중간노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하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듬해 발생한 3·1사건은 이러한 구도가 깨져버리는 계기가 되었다.

제주도 인민위원회는 온건한 노선과 더불어 중앙의 방침과 다른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반탁운동 참여와 과도입법의원 선거 참여의 사실을 들 수 있다. 제주도 인민위원회는 1946년 중반까지도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제주읍에서는 2만 명의 인파가 모여 '신탁통치 절대반대'라는 슬로건으로 시위하였다. 대정면 대정국민학교 반탁 집회에서는 미군이 직접 출동

하여 대정면 인민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을 잡아가는 일이 발생하였다. 또 하나의 사례는 1946년 10월 남조선 과도입법의원 선거에 참여한 것이었다. 제주도당은 중앙의 방침을 어기면서까지 순수한 동기로 '선거 투쟁'에 돌입하였다. 이 결정은 조선공산당 제주읍당의 건의를 받아들여 도당에서 독자적으로 추인한 것이었다.

제주도 인민위원회는 1946년 8월 1일 제주도제 실시에 반발하여 '濟州島' 명칭을 고수했다. 미군정 당국에서 도제 실시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인민위원회에서는 평소 전남과 분리된 독자적인 노선을 견지하면서도 제주도 승격 문제는 미군정하에서가 아닌 정부 수립 이후에 추진할 사항이라고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 "제주도의 자치 문제는 우리 정부가 수립되면 우리 정부의 손으로 해야지, 어째 미국인의 손으로 결정하느냐는 게 거부감의 이유였지. 그래서 당에서나 우리들의 활동 과정에서는 도제가 실시된 이후에도 '道'보다는 '島'를 그대로 사용했지"[47]

인민위원회 측에서는 경제적인 부담보다는 전자의 자존 문제에 더 비중을 둔 듯하다. 또한 당시 도제 실시 문제가 미군정과 우파진영 인사들의 주도 아래 추진된 점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여긴 이유의 하나이다. 혹자는 "미 제국주의가 제주도를 반공보루의 본보기로 삼기 위해 우선 제주를 전라남도에서 행정적으로 분리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48]

3·1집회와 총파업을 주도했던 세력은 역사적으로는 친일세력 청산의 의지와 외세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주류를 형성했다. 이들은 인민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학교·직장 등에서 여론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던 자들이었다. 그러므로 이들의 생각과 활동에 지역민들이 지지를 보냈고, 이들이 주도한 집회

47) 이운방의 증언; ≪4·3은 말한다≫ 1, 167 재인용.
48) 제주4·3연구소, 1989 ≪이제사 말햄수다≫ 2 (한울) 31

와 파업, 항의시위에 동참하였던 것이다. 더욱이 제주도의 환경과 역사를 통해 빚어진 공동체성은 집회 및 총파업에 제주도민들이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황에 대하여 당시 총파업 사태를 취재한 ≪경향신문≫ 기자는 아래와 같이 적고 있다.

> 속칭 30만 주민이라고 하는 섬사람들은 제주도 특유한 지방색과 더불어 서로가 친밀하게 가족적인 우의 가운데 굳게 결합되어 그들이 얼마나 뜨거운 향토애를 가졌느냐는 것은 말을 몇 마디 주고받는 동안에 곧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섬을 중심으로 바다를 비롯한 온갖 환경의 악조건과 싸우며, 대외 侵擄와 말없는 가운데 공동투쟁을 하며 위대한 생활력으로 孤島를 지켜온 그들에게 거의 지방색에 가까운 이 특성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리라. 따라서 그들은 해방 이후에도 육지의 영리한 무리들처럼 천박한 분열이라는 것을 모르고 오직 제주섬의 행복을 위하여 착한 형과 혹은 현명한 아들이 하자는 대로 모두 한가지 이념 아래 손쉽게 엉킨 것이다. 그들 가운데는 특권계급이라는 것이 없다. 섬 안에 메마른 황무지는 골고루 분배되어 바다와 싸우는 틈틈이 힘자라는 한도에서 개척되었으며 생활은 자작자급의 상태에서 근로의 땀이 없이는 누구나 면전에 잔인한 대자연의 힘위를 느끼는 실정이다. (중략)
>
> 해방 이후 분열과 혼돈 가운데 내포한 바 민족적 추태를 남김없이 발휘하고 있는 이 때 아름다운 채색으로 굵고 선명한 선을 그은 듯이 단일적인 집결의 건강상태를 이루고 있는 것은 마치 동화의 세계를 대한 듯 이념 형태의 시비곡절은 둘째로 하고라도 우선 소스라치게 눈이 부신 일이지만 제주도가 아무리 독자적으로 전진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순박한 섬사람들은 이런 사정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먼저 3월 1일을 앞두고 육지로부터 경찰대가 상륙을 하였을 때 그들은 내심으로 적이 의아하였던 모양이다. … 이 파업에 관공리는 물론 제주출신 순경들까지 참가를 한 것은 제주의 특성을 아는 사람으로서는 조금도 놀랄 것이 없는 일이다.[49]

49) <파업 후의 제주도 답사 현지보고> ≪경향신문≫ 1947. 4. 2

또한 3·1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고창무[50]가 기고한 다음의 글에서도 제주도의 좌익세력이 강했던 이유와 제주도민의 공동체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

> 제주도민은 이조시대에는 先罰後啓의 특권을 장악한 목사의 전횡에, 일제시대에는 郡守와 警察署長과 檢事의 직권을 한 손에 잡고 갖은 횡포를 다하던 島司의 억압에 시달려 관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복종하여야 한다는 체념과 생사의 판가름을 하여야할 궁지에 처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猛進하는 성격, 이와 같은 도민의 이율배반의 심성은 方哥 난, 이재수란, 일제시대의 해녀사건 등이 이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해방이 되자 건국준비위원회가 되고 이것이 발전적 해소되어 인민위원회가 조직되고 한국민주당이 조직되고 임시정부의 환국과 같이 한국독립당이 활동을 개시하고 이승만 박사의 환국과 독립촉성회의 결성, 이외에도 우후죽순격의 대소정당의 난립과 좌우익의 분열, 그 결사적 항쟁은 우리 민족의 쓰디쓴 과정이었다. 제주도에는 건준을 거쳐 인민위원회 간판과 민주청년동맹의 간판이 나붙고 후에 한독당, 독촉의 간판은 붙었으나 한민당 간판은 없었다. 이렇게 되고 보니 당시의 미군정이나 권력층에서는 타처에서는 못 보는 좌익계열의 간판이 버젓이 붙어있으니 눈에 가시였고 권력층에 아부하여 출세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小吏輩에게 針小棒大의 조작재료가 되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그러나 외부에서 선전하는 바와 같이 제주도민이 빨갱이는 아니었다. 분별 있는 분은 생각하여 보시라. 土豪도 없고 3정보 이상 농토를 가진 지주도 없는 이 고장에 당시 각 정당이 서로 떠들어대던 농토의 무상몰수 무상분배, 유상몰수 무상분배, 유상몰수 유상분배 등에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 헌신적 투쟁을 하였겠는가. 자고로 夜不閉門 道不遺拾의 미풍이 있다는 도민에게는 日出而作하고 日入而息할 수 있는 자유만 보장되면 그만인 것이다"[51]

---

50) 제주도 금융조합 이사로 있으면서 3·1투쟁기념준비위원회와 제주도 민전 임원을 지냈다. 3·10총파업 직후 미군정에·검거되어 군정재판에서 벌금 3천 원형을 언도받았다(제주지방심리원 판결문, 서기 1947년 刑公第159號).

51) ≪조선일보≫ 1960. 7. 16

위 두 글을 종합해 보면, 해방 직후 타지역보다 제주지역에서 사회주의 세력이 주도권을 잡은 데에는 나름의 역사적 배경이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지역은 토지가 척박하고 주민들은 대부분 소규모 민유지를 소유한 자작농이었기 때문에 지주전호제가 발달하지 못했다. 또한 지역사회를 주도할 강력한 유림세력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근대이행기에 부르주아 민족주의와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토착세력이 미약했다. 오히려 낮은 생산력 경제구조 하에서 사회경제적 형평성을 유지하였고, 섬이라는 조건에서 빚어진 독자적 정치·사회·경제구조를 오래도록 유지해 왔기 때문에, 문화적 연대감과 공동체 의식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강하다. 이러한 역사적 조건이 사회주의나 아나키즘이 제주지역에 걸맞은 이념으로 쉽게 파급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념이 반란의 요소를 갖는다거나 소비에트체제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었다. 제주도민 대중들의 지향점은 주변부에 처해 있는 독자적인 단위로서 제주도에 미쳐진 외부세력(세계냉전체제, 한반도 중앙권력)의 물리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데 두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과거 독립된 단위로서 자율성을 나름대로 추구하던 섬 공동체에 가해진 외부로부터의 압박은 자연스레 섬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였을 것이며, 이때 이들을 조직해낸 것은 지도부의 사회주의 이념이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제주도 좌파세력의 사회주의 이념은 섬사람들을 조직화시켜낸 사상적 外皮에 불과하다.

이러한 주도세력이나 제주도민들의 정치적 성향을 이데올로기가 아닌 자치지향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52] 물론 위의 ≪경향신문≫ 기자도 지적하듯이, 내륙지방의 분열 상황과 달리 1947년 초 제주도민은 '단일한 결집' 상태를 이루고 있었지만, 제주도의 '독자적인 전진'(자치)은 애초 불가능한 것이었다. 결국 이러한 단일대오를 균열시키기 위해 육지로부터 경찰이 제주에 들어오게 되었고,

52) 필자는 최근 4·3증언의 내용을 자치의식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보았다(박찬식, 2006 <4·3증언 프레임과 제주민의 자치의식> ≪탐라문화≫ 28).

3·1발포는 예견된 것이었다.[53] 외부세력의 권력 남용에 대한 반감의 표출이 총파업이었고, 이 파업에 공무원과 제주출신 경찰까지 참가했던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3·1집회 및 총파업 주도세력은 자신들의 민족적이고 자치적인 정치사회적 지향점을 대중들의 정서와 연결시키려고 하였다. 제주읍에 역사상 최대 인파가 모인 1947년 3·1기념식에서는 "3·1정신을 계승하고 발양할 것을 다짐하며, 외군 철퇴, 외세의 간섭 배제, 미소공동위원회의 조속 개최, 조국의 신속한 통일독립의 전취" 등을 외쳤다. 3·10관민총파업 때에도 "감찰청장을 즉시 파면하고 발포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무장응원대를 즉시 철수하라! 미군 책임자는 사죄하라"는 요구와 함께, "미소공위는 즉시 재개하라! 조국의 분단 음모를 분쇄하자"라는 주장이 씌어있는 삐라가 도처에 붙었다.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에서 각 지역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작성한 삐라에는 "살인주범 강동효 서장은 친일파·민족반역자와 결탁하여 육지에서 사람 잘 죽이는 경관 100명을 불러 들여놓고는 거리마다 돌아다니며, 인민을 협박하고 있다. … 3·1사건은 경찰의 계획적 음모였다. 경찰의 수뇌부는 모두가 일제의 충복이었다. 일제 때에 농민을 못살게 군 것도 그놈들이다. 공출 납세 노역을 총칼로 강제시킨 것도 그놈들이다. 해방된 오늘에 그들의 무장을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한 것인가. 또다시 농민을 외래세력에 팔아먹으려는 것이다"라고 하여,[54] 대중들의 외래경찰과 친일파에 대한 반감을 유도하였다.

물론 각 읍·면별로 열린 대규모 군중집회는 남로당의 조직적인 활동의 결과이지만, 외곽조직인 민전·인민위원회·민청·부녀동맹·교원조직·직장조합 등의 대중운동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

53) 기자는 "더욱이나 상륙을 한 응원경찰대는 이른바 남조선 소요사건(10월 항쟁)의 피비린내 나는 참정을 몸으로써 겪은 사람들이라 여기에 거의 숙명적인 대치를 이루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지적하였다.

54) 제주지방심리원 판결문(서기 1947년 刑公 第95號)을 보면, 서귀면 교원조합에 이 같은 내용의 비라가 전해졌다. 똑같은 내용의 비라가 삼양1구에 살포되기도 하였다(앞 ≪제주항쟁≫ 183~184).

다. 또한 대중들의 새로운 사회공동체의 출현에 대한 기대감이 과거 3·1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날에 집중되었고, 항일운동가 출신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로 이어졌다고 보인다.[55] 때문에 증언자들은 1947년 3·1 집회와 총파업을 공통적으로 '3·1운동'이라고 부르고 있다. "3·1운동에 가서 만세 불렀다"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56] 이는 "실질적으로 아직 해방되지 않은 민족이 해방을 위해 계속 싸워나가야 한다"는 당시 제주도 대중의 정서가 담긴 역사적 기억이라 할 수 있다.

1949년 4월 4·3사태가 진정된 후 작성된 미국 정보보고서에는 당시 제주인들의 기질을 "천성적으로 정직하고 독립적이며 육지에서 온 관료들과 이주해온 사람들과 결부되는 간섭과 도둑질과 독직 등에 대해서 대단히 분개한다"고 하였다. 실제로 인민위원회의 자치활동, 3·1시위 사건, 총파업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제주인의 자치 의식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었다.[57]

1947년 3·1발포와 3·10총파업을 계기로 제주도 민중과 좌파 민족

---

55) 마을 대동청년단 훈련부장을 지낸 강위상(한림면 수원리)의 다음 증언이 참고된다. "해방이 되고 나서 제주에서는 좌다 우다 하는 것을 모르는 상태인데 3·1절 기념행사를 하게 되었어. 3·1 행사는 독립운동에 뜻을 뒀던 분들이 3·1운동에 주관이 되어 행사를 하게 되니까 우리는 그때 좌익이다 우익이다는 모르고 독립운동에 대한 뜻을 기리면서 그 행사를 치르게 되었지"(앞 ≪제주항쟁≫ 240).

56) 앞 ≪이제사 말햄수다≫ 2, 99·113·127·143

57) 미국 측에서는 "4월 제주도에서 발생한 소요는 단지 부분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의 활동 때문으로 보입니다. 군정장관 윌리엄 딘 소장이 제주도를 방문하고, 주로 이북 출신들인 경찰과 최근 제주도에 들어온 청년단체 회원－이들 또한 주로 이북 출신으로 구성된 서북청년회원으로－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원한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주도민들은 분명히 모든 육지사람들을 싫어하며 남한사람들이 싫어하듯이 북한사람들에 대해 특별한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바꿔 말해 제주도민들은 역사적 견지에 비춰 이방인들에게 치안을 맡기거나 방해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즉 그들은 그들 자신의 치안을 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공산주의 선동가들은 이 원한을 간파하고 자신들의 대의명분을 위해 나쁜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제주도에 왔습니다"(1948. 5. 4 <항공우편> A-58, 서울 주재 미 정치고문관이 미 국무성에 보낸 우편)라고 하여, 이런 제주도민의 정서를 적고 있다.

운동세력은 제주도 자치정부(인민위원회)를 탄압하는 미군정과 정면으로 대결하였다. 자치투쟁과 생존권투쟁에서 반제자주화 평화항쟁으로 전환한 것이다.[58] 그러나 3·1사건 이후 미군정의 강력한 탄압, 육지로부터 들어온 서북청년회의 폭력에 직면하여 제주민들은 강력하게 저항하였고, 그 결과는 이듬해 무장봉기와 대량 학살로 나타났다.

Ⅵ. 맺음말

필자가 머리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제주역사 자체의 관점과 제주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3·1집회와 총파업의 주도세력을 중심으로 3·1사건에 대해 검토·해석한 결과를 정리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 3·1사건은 전통시대 제주도 민란과 항일운동의 전통을 이은 민중운동사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3·1절 기념식에 전도적(모든 읍·면 단위)·거도적(모든 계층)으로 5만 명 가까운 대중이 참여했으며, 발포사건에 이어 제주역사상 초유이면서 유일의 3·10총파업에서 그것은 최고조에 달했다. 외부세력의 권력 남용에 대한 반감의 표출이 총파업이었고, 이 파업에 공무원과 제주출신 경찰까지 참가했던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탄압에 대한 공동체적 대응은 역사 속에서 이어져 온 것이었으며, 제주도 좌파세력은 이러한 제주민의 정서를 조직적으로 극대화시켜 놓았다. 이러한 주도세력이나 제주민들의 정치사회적 성향을 자치의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외부에서 바라본 제주도 좌파세력의 사회주의 이념은 대중조직화에 활용되었던 사상적 외피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

58) 고창훈, 1989 <앞 논문> 260. 3·1집회에서 좌파세력은 1919년 3·1운동과 1946년 10월 항쟁의 민족적 의미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정도에 그쳤으나, 총파업을 계기로 미군정에 대한 강력한 저항과 배격의 투쟁 방침이 부각되었다(위 ≪제주항쟁≫ 189).

둘째, 3·1사건은 제주지역의 이념과 지배엘리트가 변화하는 계기점이 되었다. 인민위원회 지도부는 거의 대부분 3·1사건의 핵심에 있던 사람들로서 이들 대다수는 항일운동을 경험하거나 일본에서 귀환한 세대들로서, 일제하 제주지역과 일본으로 나누어져 있던 항일운동가 그룹이 통합된 형태를 띠었다. 또한 시위와 총파업에 참여한 주도세력에 교사·공무원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강한 민족의식과 근대의식, 자치의식을 가졌던 그룹으로서, 식민지시대로부터 해방직후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이념과 세력을 실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4·3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그 중간에 놓여있는 3·1사건을 정점으로 그들의 기대는 좌절되어갔다. 이들은 산으로 피신하고 일본으로 밀항해 갔으며, 섬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대학살 시기에 거의 대부분 희생되었다. 특히 총파업에 가담했던 교사·공무원 등은 4·3 당시 검거자 명부에 등재되어 다수 총살되었고, 예비검속 대상에도 올라 한국전쟁 직후 희생되었다. 이로써 제주사회에서 오랜 기간 민중운동과 사회운동의 맥이 단절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셋째, 해방공간 제주사회에서 거시적으로 '중앙과 지방'의 역학관계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3·1사건을 계기로 꺾여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3·1사건을 전후하여 지역 자치에 대한 커다란 기대감이 표출되었는데, 이는 일제하 도외 유출과 새로운 세계관의 형성에 따른 당연한 기대감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3·1사건 이후 제주도는 '빨갱이섬'으로 취급되고 제주도민은 '빨갱이 사냥(Red Hunt)'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이로써 조선시대 제주에 대한 중앙의 '변방관'이 부활하였고, 4·3을 거치며 중앙의 변방 제주에 대한 억압이 이루어졌다. 제주 민중의 자치와 자율을 물리력으로 눌러버린 것이다. 이러한 지점의 중간에 3·1사건은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상당히 많은 한계를 직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선 연구의 시각을 지나치게 제주사회의 특수성에 치중시킨 것은 아닌가한다. 한 지역 단위를 중심으로 지도부(당)와 주도세력, 대중과의 연관성을 살피려고 하다보니, 다른 지역과의 비교검

토가 소홀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남로당 중앙당의 제주도에 대한 방침과 제주도 좌파세력의 수용 과정, 1946년 10월 항쟁과 3·1사건과의 비교 검토 등을 통해서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제주 민중의 다양한 생각과 정서·행동양식, 제주사회 공동체 내부의 분열과 대립 등 다양한 실상 등을 채 정리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채록·수집된 다양한 증언 내용을 위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글에서는 큰 그림을 그린 것으로 하고 후속연구에서 미시적인 연구를 시도할 것을 기약해본다. 마찬가지로 이 연구의 주자료인 판결문과 남로당 문건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있다. 판결문에 나와 있는 대강의 내용만을 이번 글에서는 다루었다. 판결문의 내용에 대한 사료비판을 동반한 세밀한 검토 또한 후속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주제어 : 3·1사건, 3·1집회, 3·10총파업, 항일운동가, 인민위원회, 민주주의민족전선, 남조선노동당, 3·1준비위원회, 3·1대책위원회, 군정재판, 자치의식
(투고일 : 2005. 11. 11 / 심사완료일 : 2006. 2. 27)

〈ABSTRACT〉

The Study on Sam-il(March 1st) Incident, 1947 —Focusing on the demonstration and leading group of General Strike—

Park, Chan-Sik

This study analyzes the 'Jeju Sam-il Incident'(Event of 1 March, 1947) in view of the perspectives of Jeju history itself and Jejueans (Jeju Islanders). It is reviewed on the 'Sam-il Incident' focusing on the 'Sam-il' demonstration and leading group of general strike. The consequence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Sam-il Incident' is the example in the people's movement history which originated from Jeju struggle during the traditional era and anti-Japanese colonial rule struggle. In 'Sam-il' ceremonies, there were about 50,000 people gathered in every walks of life across the Jeju island. The firing at civilians by policemen which occurred the same day touched off the March 10 General Strike that was the first and the only one in Jeju history. To Jejueans, General Strike was the expression of the antipathy against power abuses of mainlanders. Even civil servants and policemen whose hometowns are Jeju island participated in the General Strike. The Communal resistance against the repression from the outside is the kind of traditions in Jeju history. The political and social attitude of Jejueans is interpreted as self-governing consciousness. The idea of socialism of left-wing groups in Jeju island was the ideological cover for mass organizing at best.

Second, 'Sam-il Incident' was the turning point that ideology and ruling elites in Jeju island change. Most of the leadership of People's Committee had experienced anti-Japanese colonial rule struggle and repatriates from Japan. And they were in the center of 'Sam-in Event'. Moreover, there were a lot of school teachers and civil servants in the leading group of demonstration and general strike. They had strong national, modern and self-governing consciousness. On liberating from Japan, they were trying to achieve new ideology. But, their hopes were frustrating by the momentum of Sam-il Incident. They escaped to the mountains and some of them were smuggled into Japan. And the rest of them who remained the island were killed during the process of 4·3(Sa-sam) uprising. Therefore, it brought us the consequences that social and people's movements which had been long history were cut off.

Third, 'Sam-il Incident' was the momentum that the changeable possibilities of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and Local' were broken. After 'Sam-il Event', Jeju island were treated as 'Red Island' and the Jejueans were the targets of 'Red Hunts'. Therefore, 'the view of the marginal area' which existed during the Chosun Dynasty was revived. There had been clamped down on Jeju by central government through 4·3 uprising. The central government repressed the self-governing rule by physical forces.

Key words : Sam-il Incident, Sam-il demonstration, 3·10 General Strike, anti-Japanese colonial rule activist, People's Committee, Democratic and National Front, South Korea Labor Party, Preparation committee for Sam-il ceremony, Committee for Solving Sam-il Incident, the court under the military government, self-governing consciousness